

지역단위 푸드플랜의 기대효과 분석과 향후 과제

정은미 · 최병옥 · 정천섭 · 정환열

연구 담당

정은미 | 연구위원 | 연구 총괄, 제1~4장 집필

최병욱 | 연구위원 | 문헌조사 및 설문조사 분석

정천섭 | (주)지역파트너플러스 | 사례지역 조사, 제4장 집필

정환열 | (주)지역파트너플러스 | 사례지역 조사, 제4장 집필

수시연구과제 P245

지역단위 푸드플랜의 기대효과 분석과 향후 과제

등 록 | 제6-0007호(1979. 5. 25.)

발 행 | 2018. 3.

발행인 | 김창길

발행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217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인쇄처 | (주)프리비 061-332-1492

ISBN | 979-11-6149-185-1 93520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머 리 말

문재인 정부는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을 목적으로 국정 100대 과제에 ‘국가 및 지역 푸드플랜 수립’을 명시하였다. 지역단위 푸드플랜은 농가소득이 낮은 중소농과 믿을 수 있는 먹거리를 희망하는 소비자의 이해, 지역의 지속가능성(일자리, 순환경제, 사회적 경제 활성화) 제고 측면에서 제기되었다. 이는 2015년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일명 직거래법)의 유통혁신 영역보다 넓은 개념의 정책이다.

지역단위 푸드플랜은 실행 계획이다. 지금까지 지역에서 개별사업으로 진행된 로컬푸드 사업을 행정과 민간이 협력하여 시군 통합형 관리체계로 전환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중소농 중심의 생산기반 확충(다품목, 소량, 연중공급 가능), 농업인의 소규모 가공을 포함한 6차 산업과 지역개발 사업의 연계, 관계형 시장 창출(직매장, 직거래장터, 꾸러미, 레스토랑, 음식점 공급, 학교급식, 공공급식, 지역 외 공급), 도농교류와 식교육 등이 포함된다.

이 연구는 지역 푸드플랜 정책에 필요한 사전 연구로서 3개 시군의 먹거리체계를 심층 분석하였다. 지역 푸드플랜의 관점에서 통합적 운영 및 관리를 가정하여 기대효과를 산정하고 실행 과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 연구를 수행하는 데 도움을 주신 3개 시군 담당자와 설문조사에 응해주신 지역민들, 자문으로 도움주신 전문가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아무쪼록 이 연구가 지역에서 먹거리를 매개로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계획임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기초지자체가 푸드플랜을 추진하는 데 참고가 되기를 기대한다.

2018. 3.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김 창 길

요 약

지역단위 푸드플랜은 실행 계획이다. 지금까지 지역에서 개별사업으로 진행된 로컬푸드 사업을 행정과 민간이 협력하여 시군 통합형 관리체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중소농 여기에는 중심의 생산기반 확충(다품목, 소량, 연중공급 가능), 농업인의 소규모 가공을 포함한 6차 산업과 지역개발 사업의 연계, 관계형 시장 창출(직매장, 직거래장터, 꾸러미, 레스토랑, 음식점 공급, 학교급식, 공공급식, 지역 외 공급), 도농교류와 식교육 등이 관련된다. 즉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지역 먹거리 관련 사업이 총망라되는 지역 먹거리 체계이다.

이 연구는 지역단위 푸드플랜 정책 수행에 필요한 사전 연구로서 지역 유형별로 3개 시군의 먹거리체계를 분석하였다. 지역 푸드플랜의 관점에서 통합적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기대효과를 산정하고 실행 과제를 검토하였다.

지역 푸드플랜 기대효과는 로컬푸드를 기본으로 하는 직매장, 가공센터, 공공학교급식센터, 농가 레스토랑 등 4개 사업 범위를 중심으로 생산자 소득, 생산자의 지역 내 소비 증가, 일자리 창출 3개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첫째, 지역 푸드플랜 가동으로 직매장과 가공센터, 공공학교급식센터가 가동될 경우, 생산자가 얻는 총 소득증가 효과는 청양군 최소 11억 원에서 최대 12억 원, 완주군이 최소 47억 원에서 최대 52억 원, 유성구가 최소 62억 원에서 최대 73억 원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지역 푸드플랜으로 생산자의 소득이 증가하면 그 생산자가 지역에서 소비하는 소비액(손자녀 용돈, 저축 포함)도 증가한다고 가정한 생산자의 지역 소비 증가 효과는, 청양군이 최소 2.4억 원에서 최대 2.5억 원, 완주군 최소 9.4억 원에서 최대 9.8억 원, 유성구가 최소 12.3억 원에서 최대 13.3억 원이다.

셋째, 지역 푸드플랜 관련 일자리는 생산기획, 농가조직화, 농업인 가공 활성화 등 기초 인프라 구축 후 실행조직의 일자리, 실무조직의 최소 인원을 말한다. 지역 푸드플랜으로 직매장과 가공센터, 공공학교급식센터가 가동될 경우(완주군은 현재 로컬푸드에 참여하는 인원, 청양군과 유성구는 2020년 하반기에 기

대되는 일자리 수), 청양군 95명, 완주군 340명, 유성구 308명에게 새로운 일자리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 푸드플랜은 생산자, 소비자, 지자체가 가격을 중심으로 하는 거래 이외에도 만남과 교류, 관심 등을 통해 거래를 촉진하고 지역농업과 지역사회에 변화의 동력을 제공한다. 이웃 시군의 소비자, 관광객의 방문으로 지역 내 유동인구가 증가하고, 6차 산업 육성에 따라 농촌지역의 유희자원 활용에 관심을 갖는 귀농 및 귀촌자가 늘어나 인구 유입의 효과 등 지역경제 선순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농업인구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농이나 고령농이 생산하는 소량 다품목의 판매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농업의 지속성을 높이며, 소규모 농가가 수요 변화에 대응하여 주체적으로 변화를 주도하며 지역농업에 역동성과 유연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지역별 현황 분석 결과, 농촌형에서 도시형으로 갈수록 먹거리 소비규모, 소규모 농업 및 먹거리 공공시장(학교·어린이집 급식 등) 비중이 증가한다. 1ha 미만 농가 비중은 청양군(농촌형) 59%, 완주군(복합형) 76%, 유성구(도시형) 91%이다. 지역별 공공 먹거리시장 규모는 청양군(농촌형) 9.1%, 완주군(복합형) 15.9%, 유성구(도시형) 17.1%이다. 인구 3만 명 규모인 청양군도 공공 먹거리시장의 규모는 50억 원으로 적지 않은 규모이다.

지역농업과 푸드플랜 추진의 연계와 관련한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양군은 생산 조직화, 관계형 시장 창출이 미비한 단계이다. 푸드플랜이 지역민의 생활 수준을 높이는 사업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전 군민을 대상으로 도농상생의 개념과 의의, 방법 등을 폭넓게 공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완주군은 지난 10년간 지역민이 로컬푸드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인프라는 구축하였으나, 지역민 누구에게나 지역 먹거리를 공급하도록 지역 내 유통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과제로 남아있다.

유성구는 도시 농업의 생산 조직화 강화, 관계형 시장 운영을 통해 실질 소득을 제고하고 도농상생할 수 있는 원칙과 방향을 분명히 설정하여, 지역민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원활히 공급하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차 례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1
2. 연구 목적 및 내용	6
3. 연구 방법	7

제2장 사례지역 먹거리 정책 추진 현황

1. 지역 먹거리 정책 추진 과정	10
2. 인구 및 지역농업	19
3. 먹거리 소비 및 공공시장 규모	29
4. 지역 먹거리의 생산 및 소비 의향	35

제3장 지역 푸드플랜 현황과 기대 효과

1.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효과	54
2. 가공 및 급식센터 운영 효과	60
3. 지역 푸드플랜의 정량적 효과	65
4. 지역 푸드플랜의 정성적 효과	72
5. 요약 및 시사점	81

제4장 지역단위 푸드플랜 추진 방향과 과제

1. 지역 푸드플랜의 추진 방향과 전략	83
2. 지역 푸드플랜의 분야별 과제	86
3. 사례 지역별 푸드플랜의 과제	95

표 차례

제2장

<표 2-1> 완주군 ‘약속 프로젝트’ 5대 정책	13
<표 2-2> 완주군 로컬푸드 직매장	15
<표 2-3> 연령별 인구 비율과 특징	20
<표 2-4> 3개 시군의 인구와 농가인구 변화	21
<표 2-5> 경지규모별 농가 비율과 특징	23
<표 2-6> 각 지역별 공급량 기준 자급률 비교	27
<표 2-7> 2016년 가구당 월평균 식료품 지출액	29
<표 2-8> 지역별 먹거리 소비 규모	29
<표 2-9> 지역별 공공급식의 연간 규모 총괄	30
<표 2-10> 지역별 학교급식 식재료 연간 소요액	31
<표 2-11> 지역별 아동급식 지원 연간 규모	32
<표 2-12> 지역별 저소득층 복지급식 지원 연간 규모	32
<표 2-13> 지역별 노인요양시설 급식 연간 규모	33
<표 2-14> 지역별 공공기관 단체급식의 연간 규모	34
<표 2-15> 지역별 기업체 단체급식의 연간 먹거리 규모	34
<표 2-16> 의료시설의 연간 먹거리 규모	35
<표 2-17> 공공시설 연간 식음료 이용액	35
<표 2-18> 생산자 조사 개요	37
<표 2-19> 생산자의 경영형태 및 생산품목 수	37
<표 2-20> 생산자 출하처와 먹거리 자급률	38
<표 2-21> 소비자 조사 개요	39
<표 2-22> 소비자의 장보기 및 먹거리 조달률	40
<표 2-23> 사업체 조사 개요	41

<표 2-24> 사업체의 농식품 주요 구매처	41
<표 2-25> 생산자의 로컬푸드 장점과 출하 의향	43
<표 2-26> 소비자의 식품 주요 구매처	44
<표 2-27> 소비자 로컬푸드 인지 경로 및 이용률, 장점	45
<표 2-28> 사업체의 로컬푸드 인지와 장점	45
<표 2-29> 사업체의 지역농산물 이용 의향 및 구매 시 어려움	46
<표 2-30> 생산자의 먹거리 안전 인식	47
<표 2-31> 생산자의 지역농업 생산과 소비에 대한 의견	48
<표 2-32> 소비자의 먹거리 안전성 인식	49
<표 2-33> 소비자의 지역농업 생산과 소비에 대한 의견	50
<표 2-34> 사업체의 먹거리 안전성 인식	51
<표 2-35> 사업체의 지역농업 생산과 소비에 대한 의견	52

제3장

<표 3-1> 로컬푸드 직매장 사업의 경제적 효과	56
<표 3-2> 직매장 입지별 생산자 소득 증가 산출	57
<표 3-3> 출하처 변경에 따른 절감액 산출(대도시 인근 직매장 사례) ..	58
<표 3-4> 생산자 소득 증가액의 구성요소별 비교	59
<표 3-5> 로컬푸드 직매장의 연간 지역경제 파급 규모	60
<표 3-6> 완주군 농민가공센터 개요	63
<표 3-7> 완주군 로컬푸드 공급사업의 연간 지역경제 파급 규모	66
<표 3-8> 지역별 생산자의 소득 증가 기대효과	68
<표 3-9> 지역별 생산자 소득 증가분에 따른 지역 소비 증가 기대효과 ..	71
<표 3-10> 지역별 푸드플랜 사업에 따른 일자리 창출 기대효과	72
<표 3-11>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 이전과 비교한 농업경영 변화	75
<표 3-12>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주체가 본 지역 먹거리 체계의 효과 ..	76
<표 3-13> 사례지역 사업체가 본 지역 먹거리 체계의 효과	77

<표 3-14> 사업체가 본 생산자의 변화 78
<표 3-15> 운영주체가 본 로컬푸드 이용 소비자의 변화 79
<표 3-16> 운영주체 관점에서 본 생산자와 지역의 변화 79
<표 3-17> 출하 생산자의 생산과 소비에 대한 의견 80
<표 3-18> 소비자의 지역농업 생산과 소비에 대한 의견 81

제4장

<표 4-1> 지역 푸드플랜의 분야별 과제 88
<표 4-2> 지역별 먹거리 생산 및 소비 비교 96

그림 차례

제1장

<그림 1-1> 지역단위 푸드플랜의 개념 5

제4장

<그림 4-1> 지역 푸드플랜의 기본 방향 84
<그림 4-2> 지역 푸드플랜의 추진 전략 85

제 1 장

서 론

1. 연구 배경

1.1. 지역 푸드플랜이 나타난 배경

- 문재인 정부는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 조성 전략의 일환으로 국정 100대 과제에 ‘국가 및 지역 푸드플랜 수립’을 제시하였다.
 - 지역 푸드플랜은 농가소득이 낮은 중소농과 믿을 수 있는 먹거리를 희망하는 소비자의 이해, 지역의 지속가능성(일자리, 순환경제, 사회적 경제 활성화) 제고 측면에서 제기되었다.
- 지역단위 푸드플랜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구체화하면 다음과 같다.
 - ① 농촌지역 인구의 과반수 이상인 고령농업인, 여성농업인 등 중소농의 소득 대책
 - ② 소비자가 믿을 수 있는 먹거리 공급(도농상생의 직거래)
 - ③ 완주군의 지역 활력을 이끌어낸 로컬푸드 사례의 소개 등이다.
- 현재 농촌지역의 인구 감소는 지역 공동화를 야기하여 막대한 재정 지출이

우려된다. 지역 유지를 위해 중소농이 지역에 정착하여 농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시급한 대책이 요구된다.

- 1990년대 이후 농정은 규모화 전업농, 농업법인 지원 등 농업 구조개선 정책을 실시했으나 소수의 전업농 육성에 그쳤을 뿐이다. 농업인구의 고령화, 재배품목과 경지규모의 편중으로 인한 농업소득 양극화 현상은 심화되고 있다. 우리나라 농업에서 경쟁력 있는 농가는 20% 미만에 불과하고, 생산성이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의 대상에서 제외된 중소농, 고령농 등의 농가는 낮은 농업소득으로 지역을 유지하고 있다.¹
 - 중소농은 농업인구의 80% 이상이며 농촌지역을 유지하는 중요한 인적자원이다. 중소농은 소량 다품목 생산과 지역문화의 보고이지만, 품질관리, 상품화, 판로개척 등의 경험이 부족하므로 연중 출하를 위한 기획생산, 출하시기 조정, 안전성 관리 등에 조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 우리나라 농산물 직거래는 생산자의 ‘농산물 제값받기 운동’으로 시작했으나 생협운동을 거치며 도농상생을 추구하는 방법으로 확산되었다.
- 생산자 주도의 농산물 직거래는 현재까지 꾸준히 시도되고 있지만 농산물이 갖는 물류 특성과 소량유통의 한계²로 거의 실패하였다. 다만 1980년대 생산자가 주도한 친환경농산물 직거래에서 생산자는 소비자 교육과 도농교류를 추진하며 생산과 소비가 상생의 관계임을 주지시켰다.
 - 1990년대 이후 친환경농산물 직거래는 생협이 주도하며, 안전하고 안정적인 농산물을 공급받기 위해서 생산자가 농업을 지속하도록 지원하는 생산계약, 선금금 지급, 생산 및 가격안정 기금 등의 제도를 시행하였다.

1 2015년 농어업총조사에서 전국 108만 9천 농가 중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3천만 원 이상인 농가는 17.5%에 불과함. 농산물 판매금액은 경영비를 제외하지 않은 농업조수입을 말함.

2 생산자는 소비자가 요구하는 품목과 원하는 시간에 맞추기 위해 점차 자신이 생산하지 않는 품목도 취급하지만 소량 다품목의 거래비용이 증가하고 이는 곧 경영악화의 원인이 됨. 소량 다품목 거래에 생산자가 직접 대응하기는 어려움.

- 2000년 이후 중소농이 생산하는 소량 다품목이 로컬푸드 직매장, 제철 꾸러미, 직거래 장터 등에서 상품의 다양성을 높이고, 지역의 개성 있는 상품으로 등장하며 중소농의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는 계기가 되었다.
- 완주군은 2008년 ‘약속 프로젝트 5개년 계획’ 수립으로 지역농업의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로컬푸드 정책을 추진한 결과, 지역농업의 생산, 유통, 복지 등 여러 분야를 연계하여 지역 활력이라는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
 - 완주군은 지금까지 농정의 대상에서 소외된 중소농을 중심으로, 이들이 가공과 유통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중소농의 조직화, 기획생산을 지원했다. 또한 이들의 판로 확보와 소비자의 편익을 위해 직매장과 학교공공급식센터 운영, 가공활성화를 위한 농민가공센터 등 인프라 구축을 주도하였다.
 - 완주군의 사례는, 로컬푸드가 농산물 유통, 중소농의 소득증대라는 좁은 범위가 아니라, 지역농업의 생산, 유통, 복지 등 여러 분야가 사람 중심으로 조직되고 연계되도록 지역농업을 재조정하는 지역개발임을 시사한다.
- 지금까지 로컬푸드 직매장, 학교급식, 공공급식 등 먹거리 관련 사업은 각각의 분산 매뉴얼로 진행되며 농산물 유통의 틈새시장이라는 경제성 충족의 농산물 직거래 사업으로 취급되었다.
 - 그러나 완주군 사례에서 보듯이, 지역의 먹거리 사업은 중소농 중심의 생산기반 확충(다품목, 소량, 연중 공급 가능), 소규모 가공 등 6차 산업 및 지역개발 사업의 연계, 관계형 시장 창출(직매장, 직거래장터, 꾸러미, 레스토랑, 음식점 공급, 학교급식, 공공급식, 지역 외 공급), 도농교류와 먹거리 교육 등이 서로 연계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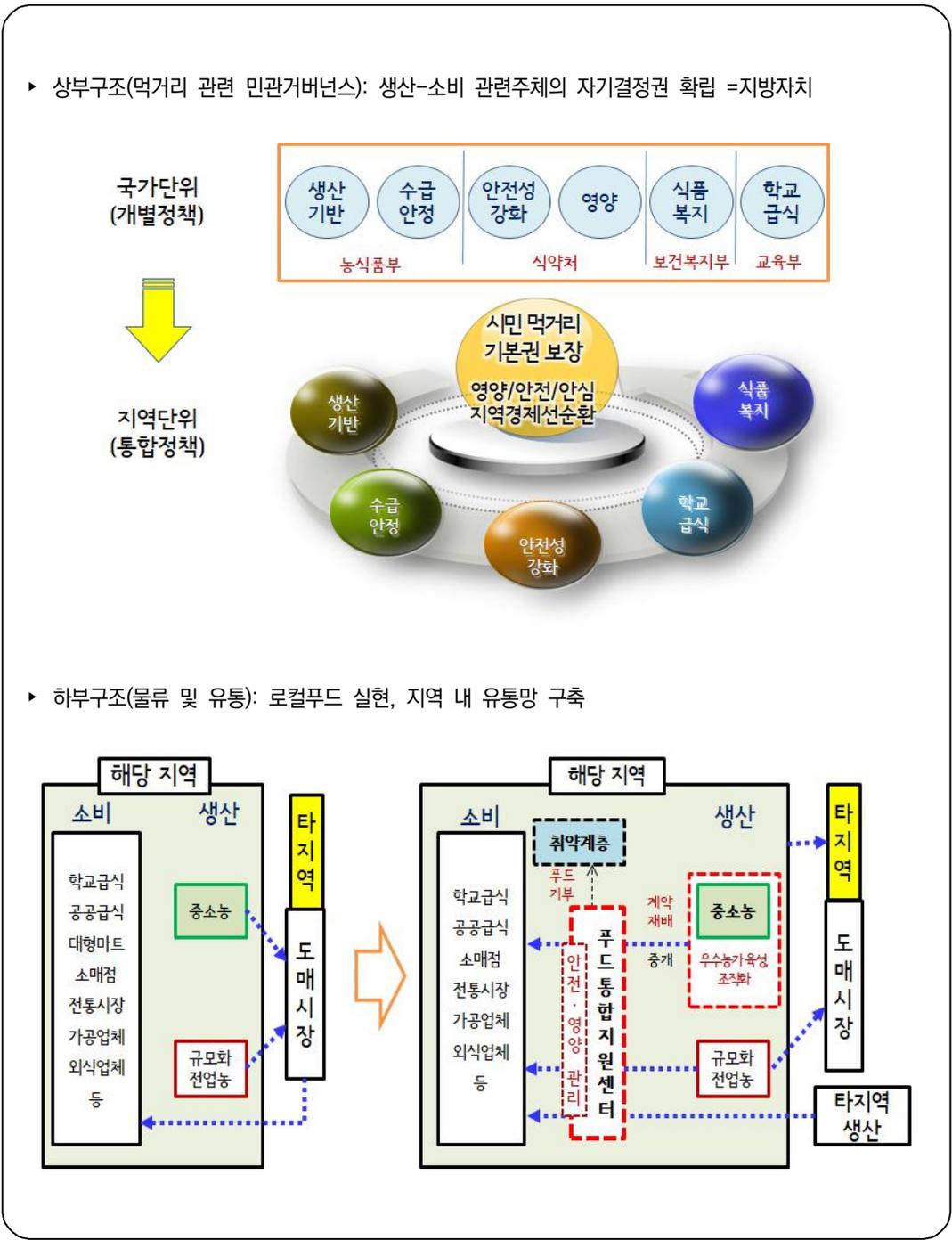
1.2. 지역 푸드플랜의 개념

- 국민 개개인의 노력으로 건강한 식생활 실현이 불가능한 오늘날, 지자체와

지역민이 지역 먹거리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해 지역 푸드플랜이 제기되었다.

- 우선 지역 내 먹거리에 관계하는 다수의 주체가 먹거리의 공공성을 인식해야 한다. 특히 지역농업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농이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구조, 즉 지역농업의 지속성을 높이는 일이 지역민 다수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인식이다.
 - 이러한 인식을 공유한 이후, 지역 내에서 먹거리 사업의 주체 간에 연계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고, 그 과정에서 지자체 행정은 각종 지원사업을 통해 필요한 부분을 보완한다.
- 그러므로 지역 푸드플랜은, 지역 농식품의 생산에서 소비까지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① 먹거리 유통망 구축(= 로컬푸드)과 ② 먹거리 관련주체의 의사결정(= 민관 거버넌스)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구조로 가정한다<그림 1-1>.
- 이 개념에 따르면, 2015년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일명 로컬푸드법)에 기초한 유통혁신과 지역 먹거리 관련주체 간 합의를 도출하는 네트워크 구축이 과제이다.
- 지역 푸드플랜은 지금까지 시군별 개별사업으로 진행된 각종 로컬푸드 사업을 시군 통합형 관리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 그동안 지역 내 소규모 생산의 조직화, 직매장 개설, 농산물 가공, 지역개발 등의 개별 단위사업으로 추진된 로컬푸드 사업은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통합적으로 수행되지 못함에 따라 시너지 효과를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 최근 서울시 ‘먹거리 기본권 선언’ 및 공공급식 협력사업을 비롯하여 대도시에서도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충족을 위해 소비지와 생산지를 연결하려는 시도가 진행 중이다. 대도시 먹거리 계획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도 선형적으로 농촌지역에서 통합적인 시스템(생산-가공-물류-공공형 운영조직 등)이 갖추어져야 한다.

〈그림 1-1〉 지역단위 푸드플랜의 개념



자료: 상부구조는 필자 작성, 하부구조는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자료.

2. 연구 목적 및 내용

2.1.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지역 유형별로 현재 지역의 수급 및 물류 인프라, 경제주체의 참여 등 먹거리 여건과 실태를 조사하여 푸드플랜 구축 시 기대효과를 가늠해 보는 데 목적이 있다.
- 첫째, 먹거리 여건을 계측할 조사지역은 3개 유형(대도시형, 중소도시형, 농촌형)이고, 각 유형별 대상지역으로 대전 유성구, 전북 완주군, 충남 청양군을 선정하였다.
 - 3개 기초지자체의 먹거리 인프라 현황 조사와 먹거리 관련 경제주체인 생산자, 소비자, 각종 먹거리 사업체를 대상으로 로컬푸드를 비롯한 푸드플랜의 가능성과 참여 의향을 설문조사한다.
 - 시군별 개별사업으로 진행된 로컬푸드 사업을 시군 통합형 관리체계로 전환할 경우 발생하는 효과를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산출하는 것이 목표이다.
- 둘째, 각 지역별 조사결과를 기초로 지역 유형별 푸드플랜 실현을 위한 관리 및 운영체계 등의 과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 지역 유형별로 먹거리 체계를 심층분석하여 지역 푸드플랜의 관점에서 통합성 견지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염두에 둔 조직체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 지역 유형별 1개 시군의 시군 통합형 관리체계 구축에 필요한 조직 전환 및 형태와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비교 검토한 후, 지역별로 실효성 있는 푸드플랜을 마련하고자 한다.

2.2. 연구 내용

- 사례지역 생산-가공-유통-물류-소비 현황
 - 시군단위 품목별 수급 계측
 - 시군 생산량-소비량 및 지역 유통량
- 사례지역 생산-유통-소비 실태
 - 시군 주민(농가, 비농가 구분) 먹거리 구매 및 의향 조사
 - 시군 가공 및 유통업체 조사
- 2020년 사례지역 푸드플랜 가동 시 기대효과 분석
 - 단계별 규모 및 투입예산
 - 유형별 경제적 효과 및 정성적 효과

3. 연구 방법

- 먹거리 관련 통계 및 현황 자료 검토
 - 시군별 생산-유통-소비 관련 관련 행정 통계
 - 시군별 생산, 유통, 소비량 및 생산품목별 자급량 추정
 - 지역 먹거리 관련 조례 및 행정 조직
 - 생산시설(시설, 저온저장고, 건조시설 등), 가공시설 현황
 - 유통시설(직매장, 직거래장터, 온라인 판매 등)과 산지유통시설
 - 중간지원조직(공공조직, 개별조직)의 운영 현황
 - 학교급식, 공공급식(저소득층 반찬배달사업, 노인복지센터 급식 등)의 복지예산과 집행내역
 - 지역 푸드플랜 관련 조직 및 시설별 참여자 수(농업인, 소비자, 조직 등)

- 현장 및 먹거리 관련주체 설문조사
 - 먹거리 관련주체의 조사는 (주)지역파트너플러스에 위탁하여 실시하였다.
 - 시군별 푸드플랜 추진 여건 및 환경조사
 - 조사대상: 담당 공무원 및 현장 실행조직 책임자 대상으로 구조화한 설문지를 통한 심층면접 방식
 - 조사내용: 통합정책과 지원시스템의 가능성, 생산조직화, 가공조직화, 관계형 시장 구축, 안전성 관리체계, 생산자와 소비자 간 소통과 소비 조직화, 행정 및 현장 실행조직의 추진체계 등 7대 과제
 - 지역 주민의 먹거리 생산 및 소비 실태와 의향 조사
 - 생산자 248명, 소비자 239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심층면접
 - 먹거리 구매 중 지역산 비중, 자가생산의 경우 자급률, 로컬푸드 인지도, 푸드플랜의 필요성 및 참여 의향 등
 - 지역 내 유통, 가공, 물류 등 식품업체 조사
 - 식품업체의 사업 범위에 대해 심층면접 조사
 - 지역산 농산물 이용 실태, 이용 의향, 지역 특성화 연계 방안

- 지자체 로컬푸드 담당자 자문회의 및 사업효과 현장 검증
 - 각 사례지역 로컬푸드 담당 공무원과 조사를 담당한 (주)지역파트너플러스, 연구진 참석 자문회의 3회 실시
 - 제1회: 1월 26~27일 각 시군별(군수, 과장, 팀장 참여), 연구개요 및 협조 요청, 해당 시군의 푸드플랜 참여 의사 타진
 - 제2회: 2월 23일 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 혁신점, 연구진 및 지자체 담당자 2명 총 13명, 지역 푸드플랜이 추구하는 작은 농업과 지역 활성화
 - 제3회: 3월 6일 완주온고을공공급식지원센터, 연구진 및 지자체 담당자 2명 총 13명, 조사결과 공유 및 지역별 푸드플랜 실행 과제 논의
 - (주)지역파트너플러스 주관으로 각 사례지역 푸드플랜 추진 인프라 투자 및 사업 효과 현장 검증: 사례 조사 내용의 타당성, 정책 과제의 실효성에 대한 검증 및 추가 의견수렴

제 2 장

사례지역 먹거리 정책 추진 현황

- 본 연구는 지역의 유형, 즉 농촌형, 도농복합형, 도시형의 사례로 다음과 같은 지역을 선정하였다.
 - 첫째, 농촌형은 충남 청양군이다. 청양군은 2014년 하반기 로컬푸드 전담팀을 구성하고 벤치마킹을 위해 공무원 2명을 6개월간 완주군에 파견하는 등 행정이 주도하는 로컬푸드를 추진하였다.
 - 둘째, 도농복합형은 전북 완주군이다. 2008년부터 자체 농정으로 로컬푸드를 추진한 완주군은 ‘로컬푸드 1번지’를 넘어 지역민 전 계층의 먹거리 보장을 목표로 푸드플랜을 추진하고 있다.
 - 셋째, 도시형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다. 유성구는 2014년부터 행정 주도의 도시형 로컬푸드 정책을 일자리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있다.

- 각 지역마다 로컬푸드 정책은 최소 4년 이상 진전된 상황이다. 본 장에서는 지역별 로컬푸드 추진 계기 및 과정과 현재 생산, 유통, 소비 등 먹거리 관련 현황 및 관련 주체의 지역농업·의향을 살펴본다.
 - 로컬푸드 정책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정책 추진 과정을 지역 유형별로 비교하고, 현 단계의 수준과 위치를 살펴본다.
 - 그리고 사례 지역별 먹거리 관련 주체인 생산자, 소비자, 관련 사업 운영 주체의 설문조사를 통해 푸드플랜 추진 방향을 검토하고자 한다.

1. 지역 먹거리 정책 추진 과정

- 전북 완주군은 2009년부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로컬푸드 정책을 추진하였다. 2012년 용진농협에 ‘로컬푸드 직매장 1호점’이 개설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사례로 전국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 2013년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 유통 개선 방안으로 지역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정책을, 각 지자체는 지역 먹거리 정책을 추진하였다.
 - 로컬푸드 직매장, 직거래 장터, 학교급식센터 등 지역산 먹거리의 지역 내 유통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 급식센터 운영 등이다.

1.1. 농촌형(청양군)

- 2013년 청양군수의 지시에 따라 칠갑산 농민장터, 읍면별 자매도시에 직거래 장터 개설, 청양군과 MOU를 체결한 도시에 직거래 장터 진출 등 직거래 사업을 추진하였다.
 - 2014년 학교급식센터를 건립하고 민간 위탁으로 사업을 시행하였고, 2015년 충남 공모사업으로 농식품 생산자 직판장을 추진하였다.
- 행정 주도의 로컬푸드 추진 과정은 다음과 같다.
 - 청양군은 주무관급 공무원 2인을 2014년 10월부터 6개월간 로컬푸드 선진지인 전북 완주군에 파견하여 업무 습득을 독려하였고, 2015년 4월 농업지원과 내에 로컬푸드팀을 신설하였다.
 - 현 단계에서 행정은 다음과 같은 조직이 로컬푸드 관련 연계성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수준이다.
 - 주민복지실: 경로복지팀, 아동복지팀
 - 농업지원과: 유통가공팀, 구기자특화팀, 로컬푸드팀
 - 지역경제과: 시장육성팀, 기업유치팀

- 농업기술센터 : 6차산업팀, 귀농귀촌팀
 - 현재 각 조직이 먹거리 사업의 연계성을 파악하고 사업적 관련성을 협의하고 있다. 구체적인 추진은 지역 푸드플랜 계획 수립 후 가능할 것이다.
- 로컬푸드 추진과 관련하여 제정한 조례
- 2016년 12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 2015년 7월, 청양군 학교급식지원조례
 - 2018년 1월, 지역농산물 공공급식지원조례 입법 예고
- 로컬푸드 관련 가공 및 유통 조직
- 영농조합법인 생활개선회 농산물가공사업단
 - 청양군 생활개선회 회원 6명 참가, 충남도 지원의 소규모 가공시설
 - 쌀 가공품 생산(한과용 고물), 연간 매출 5천만 원
 - 청양로컬푸드협동조합
 - 2015년 5월 농업인 110명이 의하여 설립한 생산자협동조합, 직원 20명
 - 청양군의 로컬푸드직매장 및 레스토랑 운영
 - 재단법인 청양군 부자농촌센터(대표자 청양군 부군수)
 - 제2농공단지 내 식품제조가공 및 창업보육 시설(사업비 76억 원 소요)
 - 직원 수 10명, 구기자 추출액, 농축액, 과일, 분말 등 제품화 8.9억 원
- 로컬푸드 관련 가공 및 유통 시설
- 관내 로컬푸드 직매장
 - 독립매장 형태로 청양로컬푸드협동조합에 위탁 경영
 - 청양로컬푸드협동조합은 22명의 직원이 직매장과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약 150여 농가에서 300여 품목을 출하
 - 관내 로컬푸드 농가 레스토랑 2개소
 - 농부밥상(로컬푸드 직매장 2층에 위치) 및 농가맛집 육화
 - 관내 꾸러미 사업

- 나눔기업(마을기업) 1개소
- 관외 직거래 장터 참여
 - 서울시청 및 각 구청 13개소, 농촌진흥청, 장승공원 등에 54농가 참여
 - 2017년 매출 실적: 약 14억 원

1.2. 도농복합형(완주군)

- 완주군은 2008년부터 지역 활성화를 위한 해결수단으로 로컬푸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 완주군은 전주시를 둘러싸고 있는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농공단지, 신규 주택 수요 등의 요인으로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인구의 2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지역의 80% 이상이 농촌이다.
 - 따라서 완주군은 농업·농촌의 문제를 지역 활성화의 핵심 사안으로 인식하고 다음과 같은 농업·농촌의 주요 과제를 도출했다.
 - 소수의 시장지향적 상업농만으로 지역농업은 유지가능한가?
 - 수요에 부응한 기획생산을 하게 할 수는 없는가? (생산-유통의 간극 해소)
 - 책임 있는 유통시스템은 어떻게 가능한가?
 - 중소농, 고령농의 정책소외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 농민가공을 통한 부가가치 증진을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은?
 - 농촌마을 및 지역사회의 통합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 행정 주도의 로컬푸드 추진 과정은 다음과 같다.
 - 2008년 완주농업농촌발전 ‘약속(Promise) 프로젝트 5개년 계획’ 발표 후, 농업·농촌발전기획단을 신설하고 2008년 4월 외부전문가를 채용하였다.
 - 약속(Promise) 프로젝트의 5대 정책은 참여주체(농업인), 경제활동(농업), 지역(농촌)의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처 방안으로 제시되었다.

〈표 2-1〉 완주군 ‘약속 프로젝트’ 5대 정책

분야	핵심 추진 전략	세부 시책
생산혁신	• 쌀-한우 경쟁력 동반강화 대책 - 경종·축산 간 지역자원 물질순환시스템 구축	• 조사료 기획생산 • 제2 경축자원화 시설
유통혁신	• 로컬푸드 활성화 - 10년 이내 지역농산물 30% 이상 로컬푸드 유통	• 다양한 직거래사업 추진 • 소규모농가 순회수집 출하지원
경영혁신	• 농가경영회생기금 조성, 경영실태조사 - 무이자 경영회생자금 및 맞춤형컨설팅 지원	• 농가경영회생기금조성, 운용
활력증진	• 도농교류거점마을 100개소 육성 - 소득향상을 위한 거점마을 육성 및 상호연계	• 도농교류거점마을 100개소 육성 • 완주군 도농교류센터 설치, 운영
복지혁신	• 농촌노인복지 종합지원시스템 구축 - 농촌노인 종합적·생산적인 복지 서비스 제공	• 8272 민원기동반 • 농촌노인 두레농장 조성사업

자료: 완주군 농업·농촌발전기획단.

- 완주군은 농업·농촌부문 차별화 전략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위해 2009년부터 5년간 농정예산을 매년 100억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고, 2010년 지방선거 시 농업예산 1,000억 원 공약으로 구체화하였다.
- 2009년 연구용역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 완주군 총 농가 9,700호 중 경지면적 1ha 미만 6,200호(72.8%), 65세 이상 농가 36.5%이며, 농업인의 성격은 은퇴농 40%, 상업농 30%, 고령농·소농 30%로 파악하였다.
- 완주군은 로컬푸드 관련 세부 정책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 기본방향: 대량생산 전업농의 도매시장 지향과 중소농·고령농·여성농 중심의 로컬푸드 관계형 시장 지향이 보완·협력하는 농정체계
 - 방법: 지금까지 농정에서 소외된 중소농·고령농·여성농의 조직화를 지원하여 ① 지역의 소농(0.5ha미만) 3,000여 농가의 안정된 소득 확보, ② 65만 전주시민 대상으로 관계형 시장 창출(생산-소비 직접 연결), ③ 마을공동체 및 작목반을 중심으로 농민가공 활성화, ④ 제3섹터형 운영조직을 통한 공공성 담보 등이다.
- 2010년 8월, 로컬푸드 관련 전담부서인 농촌활력과 로컬푸드팀을 신설하였고, 2018년 2월, 농업농촌식품과 로컬푸드팀(로컬푸드, 공공학교급식,

6차 산업, 꾸러미 담당 4명으로 구성)으로 개편하였다.

- 로컬푸드 팀 외에 로컬푸드 관련 협력 부서는 다음과 같다.
 - 농업농촌식품과 귀농귀촌팀(5명)
 - 공동체활력과 사회경제팀(5명), 마을회사팀(5명)
 - 농업기술센터 식품자원팀(4명, 농민가공센터(4명)), 과학영농팀(3명, 농산물 안전성(8명))
 - 보건소: 건강증진팀(4명)

○ 로컬푸드 추진과 관련하여 제정한 조례

- 2010년 10월, 완주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목적: 완주에서 생산·가공된 안전한 농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업인 소득안정, 농촌 환경 보전과 주민의 건강증진 및 식량주권 확보
- 2011년 2월, 완주군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 육성에 관한 조례
 - 목적: 지역인재와 지역자원 발굴을 위한 연구·조사·교육 및 홍보 활동 강화, 지역과제 해결과 지역자원 활용한 소득사업, 쾌적한 삶의 공간 확보
- 2012년 5월, 완주군 농업회사법인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2012년 12월, 완주군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 목적: 단체급식의 공공성 확보, 주민의 보편적 먹거리 복지 증진
- 2013년 3월, 재단법인 로컬푸드 공공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 목적: 로컬푸드로 공공급식 추진을 전담하는 비영리 재단법인 설립·운영
- 2013년 4월, 완주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
- 2013년 6월, 완주군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 목적 : ‘완주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설치하는 각종 로컬푸드 관련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

○ 로컬푸드 관련 가공 및 유통 조직

- 영농조합법인 완주로컬푸드 건강한밥상(꾸러미)
 - 2010년 5월, 꾸러미 사업 전담 조직으로 설립. 소농의 상품화 본격 가동

- 조합원 73명, 직원 10명, 참여 농가 150호, 꾸러미 회원 약 300가구
- 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
 - 2012년 농업회사법인(행정, 농축협 출자회사) 출범, 2014년 1월 조합원 1,225명(생산자 1,121명, 직원 101명), 다중이해관계협동조합으로 전환
 - 로컬푸드 직매장 6개, 레스토랑 4개, 기타 2개소, 두유공장 1개소 운영
- 지역농협 5개소의 로컬푸드 참여
 - 용진농협, 고산농협, 상관농협, 소양농협, 봉동농협에 로컬푸드 직매장 (숍인숍 shop in shop 형태)

○ 로컬푸드 관련 가공 및 유통 시설

- 로컬푸드 직매장: 관내 5개소, 관외(전주시) 7개소
- 농민가공센터: 2개소
 - 고산면(2012년 6월), 구이면(2015년 5월)
 - 로컬푸드 직매장에 가공품 공급

〈표 2-2〉 완주군 로컬푸드 직매장

단위: m², 백만 원

구 분	면적	소유	운영주체	사업비
용진 직매장	396	자체	용진농협	570
효자 직매장, 레스토랑	1,217	완주군	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	7,300
구이 해피스테이션, 레스토랑	558(378)	완주군	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	2,200
하가 직매장	549	완주군	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	3,000
둔산 직매장, 레스토랑	199	완주군	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	500
용진2호(효자점)	450	자체	용진농협	300
삼천 직매장	294	자체	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	150
봉동 농협	297	자체	봉동농협	94
고산 농협	374	자체	고산농협	100
상관 농협	137	자체	상관농협	85
소양 농협	132	자체	소양농협	85
전북 삼락로컬마켓, 레스토랑	729(421)	완주군	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	9,850

주: 해피스테이션(협동조합), 꾸러미쇼핑몰(건강한밥상)은 온라인판매를 포함함.

- 농가 레스토랑: 4개소
 - 모악산(2013년), 효자점, 둔산점 (2016년), 혁신점(2017년)
- (재)온고을 로컬푸드 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
 - 2013년 5월 완주군에서 출연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공공 및 학교급식을 공적 영역에서 추진하고 서울 강동구 공공급식 시범사업에 참여
 -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에 지역 농식품 공급, 완주군은 관리운영 인건비에 연간 10억 원 지원
 - 참여농가 350호(법인, 작목반, 개인 등), 직원 27명
- 소이푸드 ‘콩 종합가공시설’
 - (주)푸드스테이션(협동조합 출자 자회사), 참여 농가 800호
 - 콩 계약재배 200호, 두유 일평균 1천 개 생산으로 지역농업의 생산-가공-유통-소비의 계열화 사업으로 진행
- 완주로컬푸드 인증 시스템
 - 안전성 기준은 잔류농약허용기준치로 제초제 사용은 금지
 - 완주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약성분 320종, 수질 14종, 토양 8종 검사, 생산·유통단계의 농산물의 잔류농약검사 2017년는 2,219점 분석

1.3. 도시형(대전 유성구)

- 2014년 민선 6기 구청장의 공약사항으로 도시형 로컬푸드 정책 사업을 추진하며 일자리추진단에 로컬푸드 담당 전담부서를 신설하였다.
 - 사업의 방향은 민관 거버넌스 도시형 로컬푸드 정책으로서, 도시민의 일상생활 개편을 통한 연대와 협력,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 경제 순환 시스템 도입이 목표이다.
 - 그동안 로컬푸드 활성화 및 지원 조례 및 규칙 제·개정, 생산자·소비자 조직화 및 네트워크 활성화, 민관 거버넌스형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가공센터 및 물류지원센터 설치를 통한 로컬푸드 인프라 확산, 영유아 어린이 대상 급식지원 확대 등이 있다.

- 공동체 활성화 지원은 로컬푸드 페스티벌 연 1회, 로컬푸드 장터 및 직거래 지원, 대상별 로컬푸드 교육 및 대중강좌, 포럼 개최 등 교육과 행사를 통해 저변을 확대하는 일을 추진했다.
 - 향후 유성구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도시형 푸드정책 수립, 식품 안전관리 강화, 생산자 및 소비자 커뮤니티 활동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행정 주도의 로컬푸드 추진 과정은 다음과 같다.
- 2014년 7월, 일자리추진단 내 로컬푸드 전담부서 설치
 - 일자리 추진단은 로컬푸드, 사회적경제, 일자리 등 3개 팀으로 구성
 - 로컬푸드 팀은 지역단위 푸드플랜 사업 추진 및 푸드통합지원센터 운영과 관련 업무 추진을 위해 팀장 1명, 팀원 4명으로 구성
 - 생산자·소비자 조직화, 학교·어린이집·유치원 등 공공급식 지원 및 직매장, 가공지원센터, 식품가공, 통합물류지원센터, 안전관리, 도농교류, 교육 등을 수행한다.
- 로컬푸드 추진과 관련하여 제정한 조례
- 2014년 4월, 로컬푸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2014년 10월, 로컬푸드 인증규칙 제정
 - 2015년 7월,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위원회 구성
- 로컬푸드 관련 가공 및 유통 조직
- 생산자 연합회(바른유성찬) 구성
 - 2015년 작목반 대표로 구성된 운영위원회 및 회원조직으로 운영
 - 로컬푸드 인증 150농가, 로컬푸드에 132품목을 품앗이마을에 공급
 - 품앗이마을(유성구 농산물 유통 사회적협동조합)
 - 유성구로부터 위탁운영하는 4개의 직매장에 운영인력은 52명이다.
 - 2018년 1월 기준, 소비자 조합원 20,500명으로 매장별 1일 200~300명 이용한다.

- 열립부뚜막 협동조합: 5명으로 구성, 로컬푸드 도시락업체
 - OB연구소 협동조합: 5명으로 구성, 친환경 우리밀 제과제빵 제조
 - 팜팜협동조합: 로컬푸드의 온라인 판매 및 홍보, 5명 참여
 - 그 밖에 청년, 경력단절여성 창업활동 지원으로 마을방송, 도시농업지원 기관, 로컬푸드 홍보사업 등 6개 조직이 있다.
- 로컬푸드 관련 가공 및 유통 시설
- 희망마을 가공지원센터
 - 2015년 10월, 로컬푸드 가공상품 개발 및 가공 창업 교육을 위해 신설하였고 로컬푸드 상품 67종을 개발하였다. 사업비 5.7억 원, 운영비 연간 72백만 원이다.
 - 식품관련 전문인력 양성 과정을 운영하고, 취창업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2016년 5개소, 2017년 6개소가 창업하였다.
- 유성구는 사회적경제협의회(사회적기업 25개소, 마을기업 15개소, 자활 1개소, 협동조합 116개소)를 운영, 로컬푸드의 활동도 사회적경제협의회의 주요 사업으로 추진한다.
- 유성구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협동조합 간담회, 타운홀 미팅, 포럼 연 1회, 간담회(분기별), 위원회(반기별) 등이 시행된다.
 - 유성구 사회적경제 활동 중 로컬푸드 관련 연간 성과는 다음과 같다.
 - 로컬푸드 페스티벌 내방객(20,000명 이상)
 - 가공지원센터 및 직매장 견학(300명 이상)
 - 먹거리 관련 조합원활동 참여(200명 이상)
 - 어린이 노작교육(500명 이상)
 - 초등학교 대상 바른 먹거리 교육(2017년 935명)
 - 가공기술 및 창업 교육(120명 이상)

2. 인구 및 지역농업

2.1. 인구 구조의 특징

- 지역 유형별 인구 구조의 특징은 연령별 인구 비율을 통해 살펴보았다.
 - 연령별 인구 비율을 나타내는 그래프는 농촌형 우상향, 도농복합형 완만한 W형, 도시형 우하향 형태이다.
 - 3개 지역 유형을 비교한 <표 2-3>을 보면, 농촌형은 고령화율이 높은 데 비해 도농복합형이나 도시형은 20~50대 경제활동 인구의 폭이 두텁다.
 - 30세 미만 인구: 청양군 22.7% → 완주군 30.4% → 대전시 37.9%
 - 60세 이상 인구: 청양군 39.4% → 완주군 25.3% → 대전시 12.6%

- 지역 총인구와 농가인구
 - 청양군
 - 2016년 말 기준 총인구 32,753명 중 농가인구는 13,354명으로 농가인구의 비율은 40.8%이다.
 - 완주군
 - 2017년 말 기준 총인구 95,303명 중 농가인구는 19,156명(2016년 기준)으로 농가인구의 비율은 20.1%이다.
 - 유성군
 - 2017년 말 기준 총인구 348,428명 중 농가인구는 5,910명(2016년 기준)으로 농가인구의 비율은 1.7%이다.
 - 지역별로 비교하면, 청양군과 완주군의 농가인구의 비율은 각각 41%, 18%, 1.7%로 청양군의 농가인구 비율이 높지만, 농가인구 수는 완주군이 약 3,500명 많다.
 - 농촌형과 도농복합형 지역은 농업인이 지역농업 유지에 기여하는 주요 인적 자원임을 알 수 있다.

〈표 2-3〉 연령별 인구 비율과 특징

	연령별 인구 비율	특징
청양군 (농촌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세 미만 22.7% · 60세 이상 39.4% · 총인구 32,753명 그중 농업인 13,354명 (40.8%)
완주군 (도농복합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세 미만 30.4 % · 60세 이상 25.3% · 총인구 95,480명 그중 농업인 16,847명 (17.6%)
대전광역시 (도시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세 미만 37.9% · 60세 이상 12.6% · 총인구 348,428명 그중 농업인 5,910명 (1.7%)

주: 지자체 총인구 및 농가인구는 2016년 말 기준임.

자료: 각 지자체 통계연보(2016년).

○ 2000년 이후 총인구와 농업인구의 변화

- 청양군 인구는 2012년 최저점으로 감소한 이후는 연간 100~300명가량 증가하고 있다. 농가인구는 2011년 이후 감소폭이 크게 둔화되었고 2015년 일시적인 증가도 나타나고 있다.
- 완주군은 혁신도시 및 산업단지 등 도시화의 영향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농가인구는 감소하는 경향이며 최근 3년인 2015년 이후 농가인구의 감소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 대전광역시는 2013년을 정점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농가인구는 2011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다.
- 대도시인 대전광역시 총인구나 농촌인구는 모두 감소추세이며, 완주군은 총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농가인구는 감소하고, 청양군은 2015년 이후 총인구와 농가인구가 미약한 수준이지만 증가하는 추세이다.

〈표 2-4〉 3개 시군의 인구와 농가인구 변화

구분	청양군			완주군			대전광역시		
	총인구	농가인구		총인구	농가인구		총인구	농가인구	
		비율	비율		비율				
2000	41,025	21,636	52.7	84,009	33,596	40.0	1,385,606	25,141	1.8
2005	34,921	17,234	49.4	83,651	27,005	32.3	1,454,638	28,095	1.9
2010	32,541	15,694	48.2	85,119	25,571	30.0	1,503,664	27,605	1.8
2011	32,291	13,839	42.9	84,660	24,556	29.0	1,515,603	29,332	1.9
2012	32,087	13,698	42.7	86,164	23,607	27.4	1,524,583	28,760	1.9
2013	32,155	13,257	41.2	86,978	23,066	26.5	1,532,811	28,816	1.9
2014	32,248	13,026	40.4	90,377	22,263	24.6	1,531,809	27,590	1.8
2015	32,485	14,960	46.1	95,303	19,156	20.1	1,518,775	25,569	1.7
2016	32,753	13,354	40.8	95,480	16,847	17.6	1,514,370	24,525	1.6

자료: 각 시군 통계연보(각 연도).

2.2. 지역농업 현황과 특징

- 지역 유형별 지역농업의 대략적인 특징은 경지규모별 농가 수의 비율을 통해 살펴보았다.
 - 경지규모별 농가 수 비율을 나타내는 그래프는 전반적으로 우하향의 형태이다. 경지규모가 클수록 농가 수는 감소한다.
 - 3개 지역 유형을 비교하면, 농촌형에서 도시형으로 갈수록 경지규모별 농가 수 비율의 그래프는 경사도가 가파르게 나타난다<표 2-5>.
 - 0.5ha 미만 농가: 청양군 36% → 완주군 49% → 대전시 71%
 - 1ha 미만 농가: 청양군 59% → 완주군 76% → 대전시 91%

2.2.1. 청양군

- 지역 전통시장인 청양시장, 정산시장과 지역농협 하나로마트에도 농업인이 소량 다품목을 공급할 방법이 없으므로 지역농산물을 취급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에서 소량 다품목 시장은 크게 축소되었다.
 - 청양군민의 40%가 농업인이므로 생산 기획과 교육을 통해 소량 다품목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일은 유리하며 특히, 중소농·고령농이 참여하는 소량 다품목 소매시장 재건의 가능성은 높다고 판단된다.
- 최근 5년간 지역에 귀농·귀촌인이 증가하고, 이들 중 장류, 절임류와 같은 전통먹거리의 소규모 식품가공업에 참여하는 여성이 다수 등장하고 있다.
- 다만, 청양군 농업인의 자긍심이 도농복합지역이나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조사되었다<표 3-12, 표 3-13>. 앞으로 지역 내 학교 및 공공급식, 직매장 사업 등 사업 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을 통해 지역푸드의 가능성을 체감할 수 있는 일이 시급하다.

〈표 2-5〉 경지규모별 농가 비율과 특징

	경지규모별 농가 비율	특징																
청양군 (농촌형)	<table border="1"> <caption>청양군 (농촌형) 경지규모별 농가 비율</caption> <thead> <tr> <th>경지규모</th> <th>비율 (%)</th> </tr> </thead> <tbody> <tr> <td>0.5ha 미만</td> <td>35.7%</td> </tr> <tr> <td>0.5~1ha 미만</td> <td>22.9%</td> </tr> <tr> <td>1~2ha 미만</td> <td>18.8%</td> </tr> <tr> <td>2~3ha 미만</td> <td>10.9%</td> </tr> <tr> <td>3~5ha 미만</td> <td>6.8%</td> </tr> <tr> <td>5ha 이상</td> <td>4.8%</td> </tr> </tbody> </table>	경지규모	비율 (%)	0.5ha 미만	35.7%	0.5~1ha 미만	22.9%	1~2ha 미만	18.8%	2~3ha 미만	10.9%	3~5ha 미만	6.8%	5ha 이상	4.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5ha 미만 36% • 1ha 미만 59% • 2ha 이상은 시설재배, 특용작물 전업농 주류이지만, 1ha 미만은 중소·고령농 		
경지규모	비율 (%)																	
0.5ha 미만	35.7%																	
0.5~1ha 미만	22.9%																	
1~2ha 미만	18.8%																	
2~3ha 미만	10.9%																	
3~5ha 미만	6.8%																	
5ha 이상	4.8%																	
완주군 (도농복합형)	<table border="1"> <caption>완주군 (도농복합형) 경지규모별 농가 비율</caption> <thead> <tr> <th>경지규모</th> <th>비율 (%)</th> </tr> </thead> <tbody> <tr> <td>0.5ha 미만</td> <td>49.3%</td> </tr> <tr> <td>0.5~1ha 미만</td> <td>26.2%</td> </tr> <tr> <td>1~2ha 미만</td> <td>11.9%</td> </tr> <tr> <td>2~3ha 미만</td> <td>7.5%</td> </tr> <tr> <td>3~5ha 미만</td> <td>3.1%</td> </tr> <tr> <td>5ha 이상</td> <td>1.9%</td> </tr> </tbody> </table>	경지규모	비율 (%)	0.5ha 미만	49.3%	0.5~1ha 미만	26.2%	1~2ha 미만	11.9%	2~3ha 미만	7.5%	3~5ha 미만	3.1%	5ha 이상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5ha 미만 49% • 1ha 미만 76% • 도시화 영향, 귀촌인 증가로 소규모 농업 증가 		
경지규모	비율 (%)																	
0.5ha 미만	49.3%																	
0.5~1ha 미만	26.2%																	
1~2ha 미만	11.9%																	
2~3ha 미만	7.5%																	
3~5ha 미만	3.1%																	
5ha 이상	1.9%																	
대전광역시 (도시형)	<table border="1"> <caption>대전광역시 (도시형) 경지규모별 농가 비율</caption> <thead> <tr> <th>경지규모</th> <th>비율 (%)</th> </tr> </thead> <tbody> <tr> <td>0.5ha 미만</td> <td>71.2%</td> </tr> <tr> <td>0.5~1ha 미만</td> <td>19.5%</td> </tr> <tr> <td>1.0~1.5ha 미만</td> <td>4.3%</td> </tr> <tr> <td>1.5~2ha 미만</td> <td>2.1%</td> </tr> <tr> <td>2~3ha 미만</td> <td>1.2%</td> </tr> <tr> <td>3~5ha 미만</td> <td>1.1%</td> </tr> <tr> <td>5ha 이상</td> <td>0.6%</td> </tr> </tbody> </table>	경지규모	비율 (%)	0.5ha 미만	71.2%	0.5~1ha 미만	19.5%	1.0~1.5ha 미만	4.3%	1.5~2ha 미만	2.1%	2~3ha 미만	1.2%	3~5ha 미만	1.1%	5ha 이상	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5ha 미만 71% • 1ha 미만 91% • 일부 시설재배 전업농 제외하면, 자급농 또는 제2종 겸업농이 주류
경지규모	비율 (%)																	
0.5ha 미만	71.2%																	
0.5~1ha 미만	19.5%																	
1.0~1.5ha 미만	4.3%																	
1.5~2ha 미만	2.1%																	
2~3ha 미만	1.2%																	
3~5ha 미만	1.1%																	
5ha 이상	0.6%																	

주: 유성구(도시형)는 통계 미확보로 대전광역시 전체 경지면적별 농가 비율로 대체함.
 자료: 각 지자체 통계연보(2016).

- 청양군은 푸드플랜 수립 시 우선 실행체계 수립과 운영주체의 푸드플랜에 관한 의식 향상이 과제이다.
 - 특히, 도시지역에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상품화보다 군민의 생활수준을 높이는 푸드플랜을 목적으로 실행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 우선 실행체계는 행정 중심으로 물류 인프라를 확충하고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정책수요를 발굴하는 일이다.
 - 나아가 전 군민을 대상으로 상시 먹거리 교육, 생산자 및 관련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이론 및 현장 교육을 실시하여 점진적으로 전 군민의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

2.2.2. 완주군

- 농업인구는 크게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도시화의 영향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귀농·귀촌인도 늘고 있다.
 - 농가의 경지규모는 점차 소규모화하는 추세이다. 그러므로 지역사회에서 소량 다품목의 상품화에 관심을 갖는 농업인은 점차 많아지고 있다.
- 완주군은 2009년부터 로컬푸드 정책을 수행한 경험으로 고령농이 소량 다품목의 상품성을 인지하면서, 다양한 지역특산물이 시장에 출현하고 있다.
 - 완주로컬푸드의 성과로 중소농·고령농 3,300명을 조직화하였다.
 - 그러나 연중 지속적으로 출하하는 농가는 400~1,000호에 불과하다.
 - 실제 중소농·고령농이 연중 참여할 수 있는 품목, 상품의 기획생산이 필요한 단계이다.
- 로컬푸드 사업 추진의 영향으로 귀농·귀촌인 증가,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가 500개소 정도로 활성화되고 있다.
 - 다만, 아직 개별단위 활동에 그치고 행정의 지원 없이 경제적으로 자립한 사회적 경제는 30개소에 불과하다.

- 완주군은 푸드플랜 수립 시 지금까지 지역 외부로 향하던 완주 로컬푸드를 지역 내부, 완주 군민에게 공급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일이 과제이다.
 - 지난 10년간의 로컬푸드는 전주시에 직매장, 레스토랑을 개설하며 판로를 찾는 일이 중심이었다. 안정된 판로가 있었기 때문에 중소농·고령농의 조직화가 진전될 수 있었고 그 기반으로 완주 로컬푸드가 성장할 수 있었다.
 - 이제는 로컬푸드 10년의 성과를 통해 지역민의 식생활 만족도를 높이는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 내부의 먹거리 네트워크를 정비할 시기이다. 지금까지 지역에서 펼쳐놓은 사회적경제를 아우르며 정보 및 자원의 순환과 교류를 통해 수평적 협력 관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일이다.
 - 나아가 현재 학교급식과 공공급식을 담당하는 (재)온누리공공급식센터를 완주군 복지사업과도 연계하여 아동, 노인, 저소득층 대상 복지사업 및 요양시설, 복지시설 등을 포함하는 푸드플랜의 실현이 요구된다.

2.2.3. 유성구

- 1973년부터 대덕연구단지가 개발되었고, 1983년 대전시에 편입된 이후 1993년 EXPO 개최 등 과학기술 중심지가 되며 도시화가 진행되었다.
 - 지역농업이 도시 녹지를 유지하는 역할로 주목받고 도시민도 도시농업, 텃밭, 주말농장 등 교육과 여가 차원에서 농업에 접근하지만 지역 농업인과 연계는 사회적기업 품앗이마을의 로컬푸드 직매장에 불과하다.
- 유성구 지역농업은 도시화 이후 줄곧 감소하고 있지만 소규모이며, 겸업형 농업인 5,910명이 여전히 농업을 영위한다. 도시지역 농지는 지가가 높기 때문에 유성구의 농업인은 다음 2가지 형태가 주류이다.
 - 첫째, 도시근교 농업으로서 전업농은 시설재배를 주로 하며 단일 품목, 대량생산으로 도매시장에 출하한다. 농업소득이 주 소득원이므로 시장가격 변동에 민감하므로 소량 다품목의 복합경영과 작목 전환은 쉽지 않

다. 다만, 대량생산을 하더라도 고품질이 될수록 경영규모를 축소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안정적인 판로가 확보된다면 복합경영의 생산방식 전환도 가능하다.

- 둘째, 전원생활의 일환으로 소규모 텃밭을 경작하는 겸업형 농업인과 텃밭보다 규모는 크지만 자급용 위주로 농사짓는 고품질 농업인이다. 소량 다품목을 재배하는 복합경영이지만 안정적인 판로가 없기 때문에 자급용 생산에 그친다. 소량 다품목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직거래 장터와 출하체계가 정비된다면 생산을 늘릴 가능성이 있다.
- 유성구는 푸드플랜 수립 시 도시지역 농업과 인근 지자체의 농업 양 측면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특히 도시민이 농업을 상품으로 인식하기 이전에 사람(농업인)을 통해 자연(농업)의 순환방식을 이해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다음과 같은 과제에 대응해야 한다.
- 첫째, 지역농업이 안전한 먹거리의 공급 기지가 되어야 지역 내 토양 및 녹지 환경이 유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도시민이 인지해야 한다. 나아가 도시민이 농업에 가까이 다가가 도시민의 재능과 결합하고, 여가 및 휴식 공간으로 지역농업과 접목하거나 지역민들의 다양한 도농교류가 서로에게 자극이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
 - 둘째, 도시지역은 먹거리의 대다수를 외부에서 조달받아야 하는 상황이므로 자칫 지역 간 경쟁을 유발할 소지가 있고 도시민이 구매자로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쉽다. 그러므로 도시 지자체는 농촌형 지자체와 단순한 구매계약이 아니라 참여주체 간 상생 방안에 대한 원칙이나 기준을 설정하여 실천 과정에서 신뢰를 구축하는 일이 중요하다.
 - 셋째, 도시민이 중시하는 건강 먹거리는 생산-가공-유통 전 과정이 분절되지 않고 투명하게 정보가 공개되어야 지속적인 거래가 가능하다. 또한 생산기획, 효율적인 물류 등 농산물 유통의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자립적 경제주체로서 지역의 순환경제에 기여할 수 있다.

2.3. 지역별 먹거리 자급률

○ 공급량 기준 자급률 비교

- 자료의 제약상 공급량 기준으로 주요품목의 지역자급률을 계산하였다.
- 공급량 기준 자급률=(시군별 생산량/시군별 필요량)×100
- 품목별 생산량은 2016년 기준 시군별 농업통계(2015년 12월 기준)를 사용하였고, 품목별 필요량은 식품수급표의 국민 1인당 공급량에 시군별 인구수를 곱한 값(2015년 기준)이다.

〈표 2-6〉 각 지역별 공급량 기준 자급률 비교

	단위	청양군	완주군	대전시
		%	%	%
미곡	쌀	234.7	294.7	4.8
맥류	보리	0.0	159.5	0.0
	밀(가루)	0.0	0.7	0.0
잡곡류	옥수수	16.8	6.9	0.3
	기타잡곡	0.0	10.2	0.0
두류	콩	45.0	56.7	0.9
	팥	10.6	24.7	0.2
	녹두	19.4	28.8	0.4
	기타두류	240.9	29.8	4.9
서류	고구마	906.9	897.9	18.6
	감자	493.0	349.6	10.1
과채류	수박	0.0	1,007.8	0.0
	딸기	0.0	2,072.9	0.0
	오이	984.4	247.7	20.2
	호박	321.2	40.7	6.6
	토마토	759.0	164.1	15.5
엽채류	배추	396.7	463.0	8.1
	시금치	43.8	85.5	0.9
	양배추	0.0	490.4	0.0
	미나리	0.0	56.6	0.0
근채류	무	239.7	300.7	4.9
	당근	0.0	161.3	0.0

(계속)

	단위	청양군	완주군	대전시
		%	%	%
조미채소	고추	436.4	141.3	8.9
	양파	19.8	885.3	0.4
	마늘	115.3	345.4	2.4
	파	362.6	294.9	7.4
	생강	265.6	3,946.3	5.4
특용작물	참깨	405.3	74.3	8.3
과실	사과	164.4	7.4	3.4
	배	1,167.0	429.2	23.9
	복숭아	701.7	370.5	14.4
	포도	1,465.3	138.8	30.0
	감	134.7	2,061.4	2.8
	자두	929.5	60.1	19.0
	기타과일	400.6	87.6	8.2

자료: 통계청(2016). 농작물생산조사. 각 지자체(2015년 12월 기준); 최종우(2018). 『식품수급표 2016』.

○ 공급량 기준 자급률 비교

- 품목에 따라 자급률 수준은 큰 차이가 있다. 농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청양군조차도 자급률이 0%에서 1000% 이상까지 편차가 크다.
- 쌀을 제외하면 청양군과 완주군의 품목별 자급률도 편차가 크다. 이는 주산지 육성정책에 따라 단일품목의 규모화를 장려했기 때문이다.
- 청양군은 전통적인 채소류와 과실류의 자급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완주군은 과채류와 조미채소, 과실류 중 감의 자급률이 상대적으로 높다.
- 대전 유성구는 환금성이 높은 오이, 토마토와 같은 과채류나 과일류의 자급률이 20~30%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생산자와 소비자를 매개할 지역 내 유통망을 확보한다면, 도시지역도 품목에 따라 20% 이상 지역농산물 공급이 가능하다.

3. 먹거리 소비 및 공공 시장 규모

3.1. 지역별 먹거리 소비 추정

- 지역별 먹거리 관련 소비를 추정하기 위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소비지출 중 ‘01. 식료품·비주류음료’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 전반적으로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하여 1인 가구와 2인 가구 이상의 근로자가구와 근로자외가구로 구분하였다.

〈표 2-7〉 2016년 가구당 월평균 식료품 지출액

	근로자가구	근로자외가구
1인 가구, 실질	151,291	157,813
2인 이상 가구 평균, 실질	348,813	329,317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2017)(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L9N014&conn_path=13: 2018. 3. 4.).

- 2017년 6월 기준, 지역별 세대수 통계와 월평균 식료품 지출액을 반영하여 산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청양군은 1만 5천 세대를 모두 근로자외가구로 적용하였을 때, 소비시장 규모는 약 529억 원으로 추정된다.
 - 완주군은 근로자가구도 자급률이 높은 것을 감안하여 근로자가구와 근로자외가구를 50%씩 적용한 소비시장 규모는 약 1,694억 원으로 추정된다.
 - 유성구는 도시형이므로 13만 5천 세대를 모두 근로자가구로 적용하여 산출하면, 소비시장 규모는 약 4,689억 원으로 추정된다.

〈표 2-8〉 지역별 먹거리 소비 규모

단위: 가구

	총세대수	1인 가구	2인 이상 가구	비고	소비 규모(예상)
청양군	15,514	4,082	11,432	근로자외가구 적용	529억 원
완주군	41,623	12,182	29,441	근로자: 근로자외가구 50:50 적용	1,694억 원
유성군	135,503	41,449	94,054	근로자가구 적용	4,689억 원

자료: 각 지자체 통계연보(2016). 저자 재구성.

3.2. 먹거리의 공공 시장 규모

- 공공시장은 정부 또는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되는 학교급식, 아동 및 노인과 저소득층 대상인 복지급식, 노인요양시설이나 의료시설 등의 급식과 공공기관이나 기업체 등 단체급식, 공공시설의 매점을 포함하여 산정하였다.

3.2.1. 총괄

- 공공시장의 규모와 먹거리 소비 규모 중 공공시장의 규모는 청양군 49억 원(9.3%), 완주군 284억 원(16.8%), 유성구 860억 원(18.3%)으로 추정된다.

〈표 2-9〉 지역별 공공급식의 연간 규모 총괄

단위: 천 원

	청양군	완주군	유성구
먹거리 소비 규모(A)	52,907,335	169,354,830	468,937,423
먹거리 공공시장 규모(B)	4,940,151	28,422,906	86,027,475
학교급식	1,468,735	7,049,372	40,424,363
아동급식	395,590	916,250	8,001,000
노인요양시설	1,070,362	3,022,200	3,459,105
저소득층 복지급식	346,134	1,008,434	1,281,247
공공기관 단체급식	635,760	3,646,800	13,263,840
기업체 등 단체급식	818,640	10,004,400	14,400,000
의료시설(병원) 급식	170,820	2,748,450	4,747,920
공공시설 식음료	34,110	27,000	450,000
먹거리 공공시장 비율(B/A)	9.3%	16.8%	18.3%

주: 먹거리 소비규모는 〈표 2-8〉의 결과를 인용함.

3.2.2. 세부 사항

- 학교급식 먹거리의 연간 규모
 - 지자체는 학교급식에 식재료의 단가를 지원하고 교육청은 인건비 등 제반경비를 지원한다. 지역별로 중학교까지만 지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본

연구는 학교급식 식재료 소요액을 기준으로 시장규모를 산정한다.

〈표 2-10〉 지역별 학교급식 식재료 연간 소요액

〈청양군〉	학생 수	이용자 수	1식 단가(원)	연간 이용일수	소요액(천 원)
유치원	316	316	1750	175	96,775
초등학교	1,007	1,007	2400	180	435,024
중학교	559	559	3100	180	311,922
고등학교	853	853	3100	180	475,974
대학 이상	1,104	552	3000	90	149,040
청양군 소계	3,839	3,287			1,468,735
〈완주군〉					
유치원	1,426	1,426	1745	180	447,907
초등학교	5,072	5,072	2400	190	2,312,832
중학교	2,636	2,636	3100	190	1,552,604
고등학교	3,270	3,270	3100	190	1,926,030
대학 이상	10,519	3,000	3000	90	810,000
완주군 소계	22,923	15,404			7,049,373
〈유성구〉					
영유아	11,800	11,800	1750	155	3,200,750
유치원	7,659	7,659	1750	155	2,077,504
초등학교	22,905	22,905	2850	192	12,533,616
중학교	10,997	10,997	3450	192	7,284,413
고등학교	11,107	11,107	3750	192	7,997,040
대학 이상	54,304	27,152	3000	90	7,331,040
유성구 소계	118,772	91,620			40,424,363

주: 지역에 따라 고등학생, 대학은 1일 3식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본 연구는 중식 1식으로 계산하였고, 대학 이상은 학생 수의 약 50%가 이용한다고 가정함.

자료: 각 지자체 통계연보(2016). 저자 재구성.

- 초중고등학교의 연간 이용일수는 평균 등교일을 기준으로, 대학은 학생 기준 약 50%가 연간 90일(주 3일, 7.5개월)로 계산한 결과, 학교급식 먹거리의 연간 규모는 청양군 149억 원, 완주군 705억 원, 유성구 4,042억 원으로 조사되었다.

○ 아동급식 먹거리의 연간 규모

- 각 지자체 복지과의 아동 담당 복지 예산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방학 중 아동 급식지원을 비롯하여 지역아동센터, 영유아 간식비 등이다.
- 청양군 약 4억 원, 완주군 11억 원, 유성구 80억 원 규모이다.

〈표 2-11〉 지역별 아동급식 지원 연간 규모

단위: 천 원

	청양군	완주군	유성구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	185,400	207,000	331,840
지역아동센터 급식 지원	-	425,000	6,866,144
연중 아동급식 지원	-	87,600	
학기 중 아동급식 지원	122,400	196,650	206,056
영유아 간식비	87,790	139,200	596,960
계	395,590	1,055,450	8,001,000

자료: 각 지자체 통계연보(2016). 저자 재구성.

〈표 2-12〉 지역별 저소득층 복지급식 지원 연간 규모

단위: 천 원

	청양군	완주군	유성구
정부양곡할인지원(기초)	47,290	-	274,342
정부양곡할인지원(차상위)	11,976	-	36,841
정부양곡할인지원(경로당)	106,068	-	365,828
무료 경로식당 운영	80,000	30,000	118,200
경로당 부식비 지원	-	703,634	453,600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	100,800	111,600	32,436
기초푸드뱅크사업	-	24,000	-
영양플러스사업	-	139,200	-
계	346,134	1,008,434	1,281,247

자료: 각 지자체 통계연보(2016). 저자 재구성.

○ 저소득층 복지급식 먹거리의 연간 규모

- 지역별 복지과에서 지급하는 복지예산을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기초 또는 차상위 가정에 정부양곡할인지원을 비롯하여 무료 경로식당 운영, 경로당 부식비 지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 등이다.

- 청양군 약 3.5억 원, 완주군 10억 원, 유성구 12.8억 원 규모이다.

○ 노인요양시설 먹거리의 연간 규모

- 고령화 진전에 따라 지역 곳곳에 증가하는 시설이 노인요양시설이다. 노인요양시설은 노인요양보험의 일환으로 복지예산이 지원되므로 지역 먹거리가 현물 공급되도록 예산 지급 시스템의 변경이 필요하다.
- 지역 통계연보의 수용인원과 종사자 수, 1일 3식을 기준으로 환산한 노인요양시설 먹거리의 연간 규모는 청양군 10.7억 원, 완주군 30.2억 원, 유성구 34.6억 원이다.

〈표 2-13〉 지역별 노인요양시설 급식 연간 규모

	청양군	완주군	유성구
수용인원	239	569	747
종사자	152	351	306
총 인원(A)	391	920	1053
단가(B)	2500원	3000원	3000원
연간 규모(A*B*3*365)	1,070,363	3,022,200	3,459,105

단위: 명, 천 원

주: 1일 식수 3회, 연간 365일 이용을 가정함.

자료: 각 지자체 통계연보(2016). 저자 재구성.

○ 공공기관 단체급식 먹거리의 연간 규모

- 시군청, 경찰서, 세무서, 우체국, 교육청 등 공공기관의 단체급식은 해당 인원수에 1일 1회, 연간 240일을 기준으로 환산하였다.
- 공공기관 단체급식의 연간 규모는 청양군 6.4억 원, 완주군 36억 원, 유성구 133억 원이다.

〈표 2-14〉 지역별 공공기관 단체급식의 연간 규모

단위: 명, 천 원

	청양군	완주군	유성구
공무원(본청)	280	406	590
의회사업소	126	173	157
읍면동	133	187	161
소방공무원	70	154	214
경찰공무원	124	201	300
공공기관(세무서, 교육청 등)	50	3,694	5,000
농협, 금융 등 유관기관	100	250	12,000
총 인원(A)	833	5,065	18,422
단가(B)	3000원	3000원	3000원
연간 규모(A*B*1*240)	635,760	3,646,800	13,263,840

주: 1일 식수 1회, 연간 240일 이용을 가정함.

자료: 각 지자체 통계연보(2016). 저자 재구성.

〈표 2-15〉 지역별 기업체 단체급식의 연간 먹거리 규모

단위: 명, 천 원

	청양군	완주군	유성구
총 인원(A)	1,137	13,895	20,000
단가(B)	3,000	3,000	3,000
연간 규모(A*B*1*240)	818,640	10,004,400	14,400,000

주: 유성구 기업체는 최소로 가정하고, 1일 식수 1회, 연간 240일 이용을 가정함.

자료: 각 지자체 통계연보(2016). 저자 재구성.

○ 기업체 단체급식 먹거리의 연간 규모

- 지역의 농공단지 등 10인 이상 기업체는 단체급식소를 운영한다고 가정하여 종사인원을 산출하였고 1일 1식 240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 기업 단체급식에 소요되는 연간 식재료 소요액은 청양군 8.2억 원, 완주군 100억 원, 유성구 144억 원으로 추정된다.

○ 의료시설 단체급식 먹거리의 연간 규모

- 입원 등 병상을 소유한 의료시설의 급식 시장규모는 종사인원의 10% 이 용과 병상 수의 50%의 환자가 가동된다고 가정하여 산출하였다.

- 의료시설 단체급식 먹거리의 연간 규모는 청양군 1.7억 원, 완주군 27.5억 원, 유성구 47.5억 원이다.

〈표 2-16〉 의료시설의 연간 먹거리 규모

단위: 명, 천 원

	청양군	완주군	유성구
총사인원	135	711	2,768
종사자 중 식수인원	14	71	277
병상 수	128	2,369	3,783
실제 병상 이용	64	1,184	1,891
총인원(A)	78	1,255	2,168
단가(B)	3,000	3,000	3,000
연간 규모(A*B*2*365)	170,820	2,748,450	4,747,920

주: 1일 식수 2회, 연간 365일 이용을 가정함.

자료: 각 지자체 통계연보(2016). 저자 재구성.

○ 공공시설 식음료 등 먹거리의 연간 규모

- 도서관, 박물관 등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인원은 지역별 통계연보의 자료를 활용하여 연간 이용자를 개방일로 나누어 환산하였고, 공공시설 이용 인원의 20%가 식음료 시설을 이용한다고 가정하였다.
- 공공시설 식음료의 연간 이용액은 청양군 3.4천만 원, 완주군 2.7천만 원, 유성구 4.5억 원으로 추정된다.

〈표 2-17〉 공공시설 연간 식음료 이용액

단위: 명, 천 원

	청양군	완주군	유성구
공공시설 1일 이용자	379	300	5,000
식음료 이용 인원(A)	38	30	500
단가(B)	3,000	3,000	3,000
연간 규모(A*B*1*300)	34,110	27,000	450,000

주: 1일 식수 1회, 연간 300일 이용을 가정함.

자료: 각 지자체 통계연보(2016). 저자 재구성.

4. 지역 먹거리의 생산 및 소비 의향

- 지역 먹거리의 생산 및 소비 의향은 생산자, 소비자 및 학교와 공공시설, 복지시설, 유통업체 등 먹거리 관련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4.1. 조사대상자의 특성

4.1.1. 생산자

- 지역별 100명 이내, 단 유성구는 50명의 생산자를 무작위 추출하여 조사하였고, 응답한 생산자의 특징은 <표 2-18>와 같다.
 - 조사대상 생산자의 90%는 전업농가이며, 60대 이상이 62%이다. 청양군은 60대 이상이 생산자가 73%이지만 완주군은 51%로 편차가 있다.
 - 영농경력 10년 이하는 17%이지만 그중 청양군은 4%로 낮고 영농경력 21년 이상은 69%이며 그중 청양군 84%이다.
 - 농약을 사용하는 생산자는 모두 사용하는 경우보다 일부만 사용(86%)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7%로 조사되었다. 반면, 제초제는 사용하지 않는 비율이 14%로 높다. 도농복합형, 도시형일수록 농약과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전업 농가가 90% 이상이지만 도시형일수록 겸업, 특히 2종 겸업 비중이 높고, 특히, 40~50대 연령에서 2종 겸업 비중이 높다<표 2-19>.
 - 품목 수는 농촌형일수록 생산품목과 판매품목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다. 청양군 생산자는 유성구에 비해 생산품목이 약 6종류가 더 많다. 농촌형일수록 생산품목이 다양하므로 로컬푸드 실천은 용이한 조건이다.
 - 청양군과 완주군 생산자는 10종류 이상 생산하는 비율이 각각 67%, 47%인 데 비해 유성구는 12%에 불과하다.

〈표 2-18〉 생산자 조사 개요

단위: 명, %

	청양군		완주군		대전 유성구		합계		
	사례 수	비율	사례 수	비율	사례 수	비율	사례 수	비율	
계	100	100.0	98	100.0	50	100.0	248	100.0	
경영 유형	전업	96	96.0	88	89.8	40	80.0	224	90.3
	겸업	2	2.0	10	10.2	9	18.0	21	8.5
연령	20~30대	-	-	6	6.1	2	4.0	8	3.2
	40대	6	6.0	10	10.2	5	10.0	21	8.5
	50대	20	20.0	31	31.6	12	24.0	63	25.4
	60대	46	46.0	36	36.7	19	38.0	101	40.7
	70대 이상	27	27.0	14	14.3	11	22.0	52	21.0
영농 경력	10년 이하	4	4.0	24	24.5	13	26.0	41	16.5
	11~20년	12	12.0	18	18.4	5	10.0	35	14.1
	21~30년	50	50.0	34	34.7	9	18.0	93	37.5
	31년 이상	34	34.0	21	21.4	22	44.0	77	31.0

〈표 2-19〉 생산자의 경영형태 및 생산품목 수

단위: %

	경영 형태			농산물 품목 수		생산품목				
	전업	1종 겸업	2종 겸업	생산품목 수	판매품목 수	1~4종	5~9종	10~15종	15종 이상	
계	90.3	3.2	5.2	9.8	8.2	16.5	29.4	23.8	24.2	
청양	96.0	1.0	1.0	11.9	9.8	6.0	25.0	33.0	34.0	
완주군	89.8	4.1	6.1	9.6	8.4	12.2	38.8	23.5	23.5	
유성구	80.0	6.0	12.0	5.0	3.4	46.0	20.0	6.0	6.0	
연령	~30대	100.0	0.0	0.0	6.6	4.9	25.0	37.5	25.0	0.0
	40대	81.0	4.8	9.5	9.6	8.1	14.3	28.6	28.6	23.8
	50대	84.1	4.8	9.5	9.7	8.0	14.3	33.3	19.0	25.4
	60대	92.1	3.0	5.0	10.7	9.7	17.8	21.8	24.8	30.7
	70대~	98.1	1.9	0.0	8.3	6.2	17.3	36.5	26.9	13.5

- 생산자의 주 출하처는 여전히 도매시장 비율이 50% 이상으로 높지만 도매 시장으로 출하하지 않는 비율도 20%이며 유성구는 34%에 이른다.
- 도매시장 출하 이외에 청양군 생산자는 직거래나 중간상인에게 출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완주군은 로컬푸드 직거래, 유성구는 출하가 없는 경우가 31%이다.

- 쌀을 포함한 먹거리 금액 기준으로 농가의 자급률은 35% 수준이다.
 - 청양군 농가의 자급 수준은 39%이고 완주군은 29%로 낮은 데 반해, 유성구는 겸업 비율이 높은 대신 자급 수준은 약간 높은 42%로 조사되었다.

〈표 2-20〉 생산자 출하처와 먹거리 자급률

단위: %

	출하처					도매시장 출하 없음	먹거리 자급률	
	도매시장	중간상인	직거래	로컬푸드 직거래	출하 없음			
계	50.2	6.2	18.5	13.6	11.4	19.8	34.9	
청양군	55.7	10.4	20.3	4.6	9.0	17.0	38.5	
완주군	52.7	4.2	18.4	21.4	3.2	15.3	28.6	
유성구	37.8	4.4	16.3	10.3	31.1	34.0	42.0	
연령	~30대	31.4	2.9	27.1	28.6	10.0	37.5	37.3
	40대	57.5	2.5	21.9	11.3	6.9	9.5	33.1
	50대	52.0	5.4	20.5	15.5	6.6	14.3	29.7
	60대	54.1	6.1	13.8	14.5	11.6	17.8	35.0
	70대~	42.8	9.0	21.3	7.8	19.3	28.8	41.6

4.1.2. 소비자

- 소비자
 - 지역별 100명 이내 소비자를 무작위 추출하여 조사하였고, 응답한 소비자의 특징은 <표 2-21>과 같다.
 - 조사대상 소비자는 40~50대가 63%이며, 가족 수 3~4명이 62%이다. 청양군은 1인 가구 수 비중이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되었다.
 - 월소득은 300만 원 미만이 36%이며, 300만 원 이상이 64%이다.

〈표 2-21〉 소비자 조사 개요

단위: 명, %

		청양군		완주군		대전 유성구		합계	
		사례 수	비율	사례 수	비율	사례 수	비율	사례 수	비율
계		47	100.0	94	100.0	98	100.0	239	100.0
연령	20대	6	12.8	14	14.9	21	21.4	41	17.2
	30대	7	14.9	15	16.0	20	20.4	42	17.6
	40대	18	38.3	40	42.6	35	35.7	93	38.9
	50대	14	29.8	23	24.5	20	20.4	57	23.8
	60대 이상	2	4.3	2	2.1	2	2.0	6	2.5
거주 가족 수	1명	10	21.3	8	8.5	13	13.3	31	13.0
	2명	4	8.5	12	12.8	12	12.2	28	11.7
	3명	10	21.3	18	19.1	27	27.6	55	23.0
	4명	14	29.8	42	44.7	36	36.7	92	38.5
	5명 이상	7	14.9	14	14.9	10	10.2	31	13.0
월소득	~200만 원	11	23.4	8	8.5	21	21.4	40	16.7
	200만 원대	2	4.3	16	17.0	27	27.6	45	18.8
	300만 원대	8	17.0	23	24.5	19	19.4	50	20.9
	400만 원대	12	25.5	15	16.0	15	15.3	42	17.6
	500만 원~	13	27.7	31	33.0	14	14.3	58	24.3

○ 소비자의 85%는 주 1회 이상 장을 보고, 텃밭이나 주말농장을 이용해 직접 재배하는 비율도 19%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20대는 주 1회 미만 장보는 비율이 42%로 가장 적다. 직접 재배하는 경우도 20~30대가 10% 미만인 데 비해 40~50대는 25% 전후에 이르고, 지역별로는 완주군 23%, 청양군 17%, 유성구 15%의 순이다.
- 또한 약 50%의 소비자가 친인척으로부터 농산물을 조달받으며, 농촌형일수록 그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표 2-22〉 소비자의 장보기 및 먹거리 조달률

단위: %

	장보기 횟수					텃밭, 주말농장 직접재배	친인척으로부터 농산물 조달 비율					
	주 4회 이상	주 2~3회	주 1회	월 2~3회	월 1회		있음	10% 미만	10~29%	30~49%	50% 이상	
계	6.3	46.4	32.2	11.7	3.3	18.8	50.2	19.1	37.5	27.9	10.3	
청양군	2.1	25.5	53.2	14.9	4.3	17.0	59.6	18.8	46.9	15.6	12.5	
완주군	8.5	53.2	25.5	10.6	2.1	23.4	53.2	22.0	35.6	30.5	6.8	
유성구	6.1	50.0	28.6	11.2	4.1	15.3	42.9	15.6	33.3	33.3	13.3	
연령	20대	0.0	34.1	24.4	29.3	12.2	7.3	41.5	15.8	36.8	15.8	21.1
	30대	7.1	38.1	42.9	11.9	0.0	4.8	54.8	4.3	43.5	34.8	17.4
	40대	8.6	54.8	31.2	3.2	2.2	26.9	50.5	25.0	42.9	23.2	5.4
	50대	7.0	47.4	31.6	14.0	0.0	24.6	56.1	22.2	25.0	36.1	8.3
	60대~	0.0	50.0	33.3	0.0	16.7	16.7	16.7	0.0	50.0	50.0	0.0

4.1.3. 사업체

- 지역별 50명 이내 사업체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출하여 조사하였고, 응답한 사업체의 특징은 <표 2-23>과 같다.
 - 복지시설 4개소, 공공기관(관공서) 1개소, 교육기관(학교) 83개소, 유통업체 7개소, 가공업체 8개소, 요식업체 24개소, 기타 24개소 등 총 149개 업체이고, 개인사업자 19%, 영리법인 44%, 비영리법인 18%이다.
- 주요 먹거리 구매처는 재래시장이나 도매시장 등 시장구매가 유성구 92%, 청양군 70%이며, 완주군은 완주군이 직영하는 학교급식센터,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구매하는 비율이 높다<표 2-24>.
 - 유통업체나 가공업체는 품목에 따라 농가 직거래나 업체 대행 구매, 시장구매를 병행한다. 유통업체는 개인 식자재업체 43%, 요식업체는 재래시장 직접 구매 54%, 복지시설은 위탁업체 75%에서 주로 구매한다.

〈표 2-23〉 사업체 조사 개요

단위: 명, %

		청양군		완주군		대전 유성구		합계	
		사례 수	비율	사례 수	비율	사례 수	비율	사례 수	비율
계		50	100.0	50	100.0	49	100.0	149	100.0
업태 종류	복지시설	-	-	4	8.0	-	-	4	2.7
	공공기관	-	-	1	2.0	-	-	1	0.7
	교육기관	20	40.0	25	50.0	38	77.6	83	55.7
	유통업체	2	4.0	4	8.0	1	2.0	7	4.7
	가공업체	6	12.0	1	2.0	1	2.0	8	5.4
	요식업체	20	40.0	4	8.0	-	-	24	16.1
	기타	2	4.0	13	26.0	9	18.4	24	16.1
업체 형태	개인사업자	20	40.0	8	16.0	-	-	28	18.8
	영리법인	13	26.0	13	26.0	39	79.6	65	43.6
	비영리법인	14	28.0	10	20.0	3	6.1	27	18.1
	기타	3	6.0	19	38.0	7	14.3	29	19.5

〈표 2-24〉 사업체의 농식품 주요 구매처

단위: %

		시장 구매				업체 대행 구매				농가 직거래, 계약재배
		농협, 영농 법인	재래 시장	도매 시장	소계	학교급식 센터 등 위탁업체	식자재 업체 (개인)	식자재 업체 (대기업)	소계	
계		24.8	20.8	12.8	58.4	17.4	16.1	4.0	37.5	14.1
청양군		34.0	28.0	8.0	70.0	0.0	24.0	0.0	24.0	18.0
완주군		6.0	2.0	6.0	14.0	52.0	14.0	8.0	74.0	18.0
유성구		34.7	32.7	24.5	91.9	0.0	10.2	4.1	14.3	6.1
업태 종류	복지시설	25.0	0.0	0.0	25.0	75.0	25.0	0.0	100.0	0.0
	공공기관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교육기관	27.7	18.1	16.9	62.7	26.5	14.5	3.6	44.6	0.0
	유통업체	28.6	0.0	0.0	28.6	0.0	42.9	14.3	57.2	57.1
	가공업체	37.5	0.0	12.5	50.0	0.0	12.5	12.5	25.0	62.5
	요식업체	16.7	54.2	4.2	75.1	0.0	12.5	0.0	12.5	16.7
	기타	16.7	12.5	12.5	41.7	8.3	20.8	4.2	33.3	37.5

주: 중복응답임.

4.2. 로컬푸드³의 장점과 이용 의향

4.2.1. 생산자

○ 생산자의 로컬푸드 인지도

- 완주군은 10년 이상 로컬푸드를 추진하여 생산자의 98%가 로컬푸드를 인지하고 있다. 로컬푸드 추진이 4년 미만인 청양군은 82%, 유성구는 78%로 완주군보다 약 20%p 낮게 조사되었다.
- 현재 로컬푸드 출하자는 유성구 61%, 완주군 32%에 비해 청양군은 4%에 불과하다. 그 결과, 청양군은 ‘주변 사람을 통해 로컬푸드를 알게’된 경우가 68%인 반면, 유성구는 ‘로컬푸드에 출하’하면서 알게 된 경우가 64%로 높다.
- 생산자가 로컬푸드 출하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은 농촌형일수록 ‘농산물 제값 받기’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 생산자의 로컬푸드 장단점과 출하 의향

- 농촌형일수록 로컬푸드의 ‘가격’이 높아 제값 받기를 실현하는 것을 가장 큰 장점으로 생각한다.
- 청양군은 ‘상품성 낮은 농산물도 판매할 수 있다’ 46%, ‘농업을 이해하는 소비자’ 17%인 데 비해, 완주군은 ‘직접 만든 가공식품 판매 가능’ 26%, 유성구는 ‘소비자의 평가를 직접 확인’ 15%로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다.
-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소량 판매 가능’을 선호하고, 연령이 낮을수록 ‘직접 만든 가공식품 판매’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³ 본 절에서 ‘로컬푸드’는 지역 먹거리 체계를 대체하는 용어로 사용함. 2012년부터 정책 용어로 사용된 ‘로컬푸드’는 ‘푸드플랜’보다 인지도가 높기 때문임.

○ 로컬푸드 출하 의향

- 생산자의 30대 이하는 100%가 로컬푸드에 출하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대 이하는 비숙련 농업기술, 경영규모가 상대적으로 소규모이기 때문에 소량 다품목을 취급하는 로컬푸드가 상품성을 가늠해보는 기회로 작용한다. 달리 말하면, 영농경력이 적은 생산자에게 소량·다품목 생산을 통해 농업기술을 익히고 생산 위험을 분산 가능하게 하는 로컬푸드 출하는 농촌 정착에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다.
- 전업농이 많은 50~60대도 80% 이상 로컬푸드 출하 의향을 보이고 있다. 40대는 ‘출하처가 정해져 있다면 생산에 집중할 수 있다’는 응답이 75%로 비교적 높게 나타난다. 생산자에게 안정적인 출하처의 중요성이 나타나는 부분이다.

〈표 2-25〉 생산자의 로컬푸드 장점과 출하 의향

단위: %

	로컬푸드가 생산자에게 유리한 점							로컬푸드 출하 의향 있음	
	직거래이므로 가격이 높다	소량도 판매할 수 있다	마음 놓고 생산에 집중함	못생긴 농산물도 판매 가능	직접 만든 가공식품 판매 가능	농업을 이해하는 소비자	소비자 평가를 직접 확인		
계	70.5	46.5	46.5	26.7	18.4	10.6	9.2	83.4	
청양군	87.8	41.5	41.5	46.3	12.2	17.1	3.7	80.5	
완주군	61.5	52.1	54.2	17.7	26.0	7.3	11.5	84.4	
유성구	56.4	43.6	38.5	7.7	12.8	5.1	15.4	87.2	
연령	~30대	50.0	25.0	62.5	0.0	12.5	25.0	0.0	100.0
	40대	55.0	25.0	75.0	25.0	30.0	10.0	0.0	70.0
	50대	78.7	47.5	47.5	26.2	24.6	6.6	14.8	88.5
	60대	75.3	45.2	38.7	30.1	16.1	11.8	9.7	84.9
	70대~	56.3	62.5	43.8	25.0	6.3	9.4	3.1	71.9

4.2.2. 소비자

- 소비자가 신선농산물을 주로 구매하는 구입처는 슈퍼마켓이나 대형소매점의 비율이 50% 전후이고, 가공식품은 대형소매점과 슈퍼마켓에서 구매하는 비율이 신선농산물보다 10%p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다만, 완주군 소비자는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구매하는 비율이 신선농산물 70%, 가공식품 34%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 완주군처럼 로컬푸드 직매장이 다수 개설되어 다양한 상품이 구비되어 있다면 소비자의 이용은 증가할 것이다.

〈표 2-26〉 소비자의 식품 주요 구매처

단위: %

	신선농산물					가공식품				
	근처 슈퍼	대형 소매점	로컬 직매장	재래 시장	친환경 전문점	대형 소매점	근처 슈퍼	로컬 직매장	친환경 전문점	인터넷 쇼핑몰
계	52.3	47.3	36.8	24.7	13.8	62.3	59.4	18.8	12.6	10.5
청양군	63.8	57.4	17.0	27.7	2.1	74.5	66.0	8.5	0.0	10.6
완주군	37.2	37.2	70.2	19.1	16.0	63.8	46.8	34.0	17.0	12.8
유성구	61.2	52.0	14.3	28.6	17.3	55.1	68.4	9.2	14.3	8.2

주: 1, 2순위 중복응답임.

- 소비자가 로컬푸드를 인지하는 경로는 ‘로컬푸드 직매장’을 보았거나 이용한 경험이 40%이고, 지자체나 농협의 홍보가 20%, 주변 사람에게 들어본 경험이 18%의 순이다.
 - 완주군은 직접 로컬푸드 직매장을 이용하면서 알게 된 비율이 59%이지만 청양군은 지자체나 농협의 홍보물을 보고 알게 된 비율이 36%로 상대적으로 높다.
 - 로컬푸드를 이용한 경험은 완주군 49%, 유성구 32%, 청양군 28%의 순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로컬푸드에 대한 소비자의 높은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 다양한 상품을 결핍 없이 구비하는 일이 요구된다.
 - 소비자가 인식하는 지역농산물 소비의 장점은 품질, 안전성, 지역경제에 도움이 순으로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성구 소비자로부터 ‘환경보전에 기여’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도시지역이 환경에 보다 예민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표 2-27〉 소비자 로컬푸드 인지 경로 및 이용률, 장점

단위: %

	로컬푸드 인지 경로				로컬 직매장 이용 경험	지역 농축산물 소비의 장점					
	근처 로컬 판매장	지자체/ 농협 홍보물	주변 사람의 권유	방송, 기사를 보고		품질 좋음	비교적 안전	지역경제에 도움	비교적 저렴한 가격	환경보전에 기여	
계	39.7	19.7	18.0	12.1	37.7	64.9	40.6	40.2	20.1	12.1	
청양군	21.3	36.2	12.8	25.5	27.7	66.0	27.7	36.2	27.7	8.5	
완주군	58.5	8.5	22.3	6.4	48.9	69.1	42.6	41.5	22.3	9.6	
유성구	30.6	22.4	16.3	11.2	31.6	60.2	44.9	40.8	14.3	16.3	
연령	20대	24.4	34.1	7.3	22.0	24.4	63.4	39.0	39.0	14.6	7.3
	30대	38.1	19.0	16.7	7.1	35.7	57.1	47.6	45.2	16.7	14.3
	40대	45.2	16.1	21.5	9.7	44.1	68.8	36.6	43.0	21.5	15.1
	50대	40.4	15.8	22.8	14.0	38.6	64.9	45.6	35.1	22.8	10.5
	60대~	66.7	16.7	0.0	0.0	33.3	66.7	16.7	16.7	33.3	0.0

주: 지역 농축산물을 소비하는 장점은 중복응답임.

4.2.3. 사업체

- 사업체가 방송이나 신문 기사를 보고 로컬푸드를 알게 된 경우는 청양군 사업체가 70%인 반면, 완주군 사업체는 지자체 홍보나 로컬푸드 직매장을 이용하면서 알게 된 비율이 78%이다.

〈표 2-28〉 사업체의 로컬푸드 인지와 장점

단위: %

	로컬푸드 인지 경로				지역 농축산물 소비의 장점				
	방송, 기사를 보고	지자체/ 농협 홍보물	근처 로컬푸드 판매장	주변 사람의 권유	품질 좋음	비교적 안전	비교적 저렴한 가격	지역경제에 도움	환경보전에 기여
계	32.2	22.8	20.8	12.1	65.8	53.0	39.6	30.9	14.8
청양군	70.0	8.0	4.0	16.0	50.0	36.0	84.0	8.0	2.0
완주군	4.0	40.0	38.0	16.0	74.0	54.0	14.0	48.0	4.0
유성구	22.4	20.4	20.4	4.1	73.5	69.4	20.4	36.7	38.8

주: 지역 농축산물 우선 소비의 장점은 중복응답임.

- 로컬푸드에 대한 장점은 품질이 좋고, 비교적 안전하다는 의견이 과반수 이상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청양군 사업체는 로컬푸드의 장점으로 ‘저렴한 가격’ 84%로 가장 높은 반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8%에 불과하여 경제성을 우선시함을 알 수 있다. 유성구 사업체는 로컬푸드가 ‘가격’보다 ‘환경에 기여’함을 18%p 높게 평가하는 차이가 있다.
- 사업체의 지역 푸드플랜에 대한 인식은 완주군 98%, 청양군과 유성구 80%로 비교적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다만 지역농산물의 이용 의향은 완주군 사업체 84%이지만 청양군 50%, 유성구 47%로 약 절반에 불과하다. 학교급식센터의 수혜자인 완주군 교육기관의 경험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사업체가 지역 농축산물을 구매하는 데 어려운 점은 지역농산물의 지속적인 공급과 구매 접근성, 가격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 ‘지역농산물을 필요한 만큼 지속적으로 공급받기 어렵다’는 의견이 57%이다. 로컬푸드를 경험한 완주군 사업체보다 청양군이나 유성구 사업체는 수급을 염려하는 비율이 20%p 이상 높게 나타났고, 유성구 사업체는 산지나 생산자 확인에 대한 염려도 31%로 비교적 높다.

〈표 2-29〉 사업체의 지역농산물 이용 의향 및 구매 시 어려움

단위: %

	지역단위 푸드플랜은 필요하다	지역농산물 이용 의향	지역 농축산물 구매 시 어려운 점				
			필요한만큼 지속적인 공급 어렵다	지역농산물 취급점포가 없다	가격이 비싸 원가를 맞출 수 없다	산지, 생산자 확인이 어렵다	품질이 항상 고르지 않다
계	85.9	60.4	57.0	45.0	28.9	17.4	4.0
청양군	80.0	50.0	70.0	52.0	46.0	2.0	4.0
완주군	98.0	84.0	40.0	34.0	20.0	20.0	2.0
유성구	79.6	46.9	61.2	49.0	20.4	30.6	6.1

주: 10점 척도(0: 전혀 아니다, 5: 보통, 10: 매우 그렇다)로 조사함.

4.3. 먹거리 안전성과 지역농업에 대한 인식

4.3.1. 생산자

- 생산자는 먹거리 안전성에 대해 농산물 61%, 축산물 57%, 가공식품 55%의 수준으로 ‘안전성’을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연령이 낮고, 농산물보다 가공식품일수록 안전성에 불안을 느낀다.
 - 안전한 농축산물 생산지는 청양군, 완주군 생산자의 87%가 ‘거주지 인근’이라고 생각하지만 도시형은 ‘거주지 인근이’ 50%에 불과하다.
- 농축산물 안전성 위협요인은 생산이나 가공 과정의 ‘농약, 항생제’, ‘첨가물, 비위생’이 농촌형일수록 높고, 유통과정의 ‘부패, 변질’, ‘부적절한 약품 처리’는 도시형일수록 높게 나타난다.
 - 생산자는 농약이나 항생제 등 생산과정의 약품 사용을 먹거리의 안전성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30〉 생산자의 먹거리 안전 인식

단위: %

	먹거리 안전성 인식			안전한 농산물 생산지			농축산물 안전성 위협요인				
	농산물	축산물	가공식품	거주지 인근 지역	국내	모든 곳이 비슷	생산/가공과정		수입/유통과정		
							농약, 항생제	첨가물, 비위생	부패, 변질	부적절한 약품처리	
계	60.7	57.0	55.2	79.0	14.5	3.2	48.0	18.1	17.7	13.3	
청양군	57.8	54.5	52.5	86.0	12.0	1.0	59.0	21.0	6.0	10.0	
완주군	65.2	60.7	58.8	86.7	7.1	4.1	44.9	18.4	25.5	12.2	
유성구	55.9	53.6	52.4	50.0	34.0	6.0	32.0	12.0	26.0	22.0	
연령	~30대	52.5	52.5	48.8	75.0	12.5	12.5	25.0	25.0	50.0	12.5
	40대	53.8	53.8	48.1	76.2	19.0	4.8	33.3	28.6	33.3	9.5
	50대	60.2	56.7	54.8	84.1	9.5	4.8	47.6	23.8	12.7	17.5
	60대	60.9	56.4	55.4	81.2	12.9	1.0	51.5	15.8	15.8	12.9
	70대~	64.9	60.2	58.9	71.2	21.2	3.8	50.0	9.6	17.3	11.5

주: 안전성은 100점 척도(0=매우 불안, 100=매우 안전), 농축산물 안전성 위협요인은 중복응답.

- 생산자의 지역농업 생산과 소비에 대한 의식은 농촌형, 연령이 높을수록 ‘지역농산물이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지역에서 생산된 것이면 대체로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것은 농촌형일수록 높고, 지역농산물의 지역 유통을 희망하는 비율도 80%에 이른다.
 - 다만, 농촌형일수록 가격에 민감하여 지역산 가공식품 가격이 비싸도 구매하겠다는 생산자의 비율은 유성구가 70%인 데 비해 완주군 61%, 청양군 55%로 낮아진다.

- 연령 70대 이상은 ‘고령농·중소농의 판매시장’, ‘안정적인 소득’에 대한 수요가 80% 이상이다. 소량 다품목을 출하할 수 있는 로컬푸드에 대한 기대가 높음을 알 수 있다.
 - 연령이 낮을수록 ‘지역농산물이 안전’하거나 ‘지역유통을 희망’하는 비율이 낮지만, ‘생산자에게 안정적인 소득이 필요’하거나 ‘지역농산물을 타 지역에 홍보’하겠다는 의견은 전 연령대에서 높게 나타난다.
 - 생산자는 ‘판매’가 원활히 진행되어 ‘안정적인 소득’을 얻는 것에 관심이 가장 크다.

〈표 2-31〉 생산자의 지역농업 생산과 소비에 대한 의견

	지역농산물은 안전하다	농산물 지역유통 희망	지역산 구매는 생산자에 도움	비싸도 지역산 구매	비싸도 지역가공품 구매	고령/중소농의 시장 필요	생산자에 안정적인 소득필요	지역농산물 타 지역에 홍보희망	
계	7.4	8.0	7.9	6.0	6.0	7.8	8.2	7.8	
청양군	7.6	8.1	8.0	5.6	5.5	8.0	8.3	7.7	
완주군	7.4	7.8	7.8	6.2	6.1	7.4	7.9	7.8	
유성구	6.9	8.2	8.0	6.7	7.0	8.1	8.5	8.3	
연령	~30대	6.8	7.3	7.6	6.3	6.4	6.9	8.4	8.3
	40대	7.0	7.8	7.6	6.3	6.3	7.4	7.9	7.7
	50대	7.2	7.7	7.6	5.8	5.7	7.4	8.0	7.8
	60대	7.4	8.0	8.0	6.1	6.0	7.8	8.1	7.8
	70대~	8.0	8.4	8.4	6.0	6.0	8.3	8.7	7.9

주: 10점 척도(0: 전혀 아니다, 5: 보통, 10: 매우 그렇다).

4.3.2. 소비자

- 소비자는 먹거리 안전성에 대해 농산물 61%, 축산물 58%, 가공식품 51%의 수준으로 농축산물은 생산자의 ‘안전성’ 인식 비율과 비슷하지만 가공식품은 생산자보다 약 5%p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40~50대는 농축산물이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낮고, 40대는 가공식품에 대해 약간 불안을 느끼고 있다. 또한 농촌 소비자가 도시 소비자에 비해 안전성에 불안과 불신의 정도가 큼을 알 수 있다.
 - 안전한 농축산물 생산지는 청양군·완주군 소비자의 60%가 ‘거주지 인근’이지만, 유성구 소비자의 52%는 ‘국내’, 32%는 ‘모든 곳이 비슷’하다고 응답하였다.

- 농축산물의 안전성을 위협하는 요인은 20대는 ‘첨가물이나 비위생적인 환경’이 ‘농약, 항생제’보다 위험하다고 인식하지만 연령이 높아질수록 ‘농약, 항생제’가 위험하다는 인식이 높다.

〈표 2-32〉 소비자의 먹거리 안전성 인식

	먹거리가 안전하다			안전한 농축산물 생산지			농축산물 안전성 위협요인				
	농산물	축산물	가공식품	거주지 인근 지역	국내	모든 곳이 비슷	생산, 가공과정		수입, 유통 과정		
							농약, 항생제	첨가물, 비위생	부적절한약품처리	부패, 변질	
계	60.9	57.6	50.9	48.1	36.4	13.0	50.2	28.0	16.7	12.1	
청양군	53.6	48.3	40.4	59.6	19.1	19.1	57.4	27.7	14.9	10.6	
완주군	65.0	61.6	54.1	60.6	28.7	8.5	48.9	18.1	26.6	14.9	
유성구	60.5	58.1	52.8	30.6	52.0	14.3	48.0	37.8	8.2	10.2	
연령	20대	63.2	60.0	53.8	36.6	31.7	31.7	29.3	34.1	22.0	12.2
	30대	63.1	60.0	47.1	42.9	42.9	4.8	40.5	28.6	21.4	16.7
	40대	59.8	56.3	50.3	47.3	39.8	10.8	62.4	30.1	14.0	3.2
	50대	59.5	56.0	51.8	57.9	31.6	10.5	49.1	19.3	15.8	21.1
	60대~	61.7	58.3	56.7	83.3	16.7	0.0	83.3	33.3	0.0	33.3

주: 안전성은 100점 척도(0=매우 불안, 100=매우 안전), 농산물 안전성 위협요인은 중복응답.

- 연령이 낮을수록 유통과정의 약품처리도 불안의 요인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다.
- 소비자의 지역농업 생산과 소비에 대해서는 생산자보다 ‘지역농산물이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지역에서 지역농산물 유통을 희망하는 비율은 80%이며 농촌형일수록 높고 지역농산물 구매가 생산자에게 도움이 되고 생산자도 안정적인 소득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80% 이상 적극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역산 가공식품 가격이 비싸도 구매하겠다는 소비자의 비율은 유성구가 50% 후반인데 비해 완주군은 10%p 이상 높다. 지난 10년간 완주군의 로컬푸드 경험을 통해 지역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충성도를 높인 결과라고 판단된다.
- 연령이 높을수록 지역농산물의 안전성을 신뢰하고 홍보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인식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연령이 낮을수록 가격이 비싸면 구매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높다.

〈표 2-33〉 소비자의 지역농업 생산과 소비에 대한 의견

단위: %

	지역산 농산물은 안전하다	농산물의 지역유통 희망	지역산 구매는 생산자에 도움	비싸도 지역농산물 구매	비싸도 지역가공품 구매	고령/중소농 판매시장 필요	생산자에 안정적인 소득 필요	지역농산물 타 지역에 홍보 희망	
계	6.5	8.0	8.3	6.4	6.1	7.5	8.2	7.9	
청양군	6.3	8.5	8.5	6.0	5.8	7.1	8.5	8.3	
완주군	7.2	8.4	8.6	7.0	6.7	7.9	8.5	8.3	
유성구	6.1	7.5	7.9	5.9	5.6	7.2	7.8	7.3	
연령	20대	6.0	7.2	7.8	4.9	4.6	6.7	7.5	6.9
	30대	6.3	7.9	8.4	6.4	6.0	7.9	8.4	8.2
	40대	6.7	8.3	8.6	6.6	6.3	7.8	8.5	8.1
	50대	6.7	8.0	8.0	6.9	6.7	7.1	8.0	7.9
	60대~	8.0	9.2	9.0	6.7	7.2	9.0	9.0	8.7

주: 10점 척도(0: 전혀 아니다, 5: 보통, 10: 매우 그렇다)로 조사함.

4.3.3. 사업체

- 사업체 운영주체가 인식하는 먹거리 안전성은 생산자나 소비자보다 크게 높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안전한 농축산물 생산지는 ‘거주지 인근’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60%에 근접하지만 도시형으로 갈수록 국내 모든 농산물이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다.
- 농축산물 안전성을 위협하는 요인은 수입과 유통과정의 요인보다 생산과 가공과정의 요인이 크다고 인식하며, 농촌지역일수록 생산과정의 ‘농약, 항생제’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2-34〉 사업체의 먹거리 안전성 인식

	먹거리가 안전하다			안전한 농축산물 생산지			농축산물 안전성 위협요인			
	농산물	축산물	가공식품	거주지 인근 지역	국내	모든 곳이 비슷	생산, 가공과정		수입, 유통과정	
							농약, 항생제	첨가물, 비위생	부패, 변질	부적절한 약품처리
계	72.1	71.1	66.6	58.4	28.9	9.4	55.7	30.2	11.4	8.1
청양군	62.8	62.4	62.2	62.0	10.0	24.0	62.0	34.0	2.0	6.0
완주군	77.3	73.7	65.3	60.0	34.0	2.0	58.0	26.0	14.0	14.0
유성구	76.3	77.3	72.2	53.1	42.9	2.0	56.9	30.6	18.4	4.1

주: 안전성은 100점 척도(0=매우 불안, 100=매우 안전), 농산물 안전성 위협요인은 중복응답.

- 지역농산물의 안전성이나 지역 유통, 타 지역에 홍보는 지역별 편차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 청양군 사업체는 지역농산물 안전성에 대한 신뢰가 낮고 가격에 가장 민감한 반면, 완주군은 지역농산물에 대한 신뢰가 상대적으로 높고 가격이 비싸더라도 구매하겠다는 의향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사업체는 지역 내 유통을 희망하고, 지역산 구매가 생산자에게 도움이 될 것을 알지만 가격에 대해서는 매우 민감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2-35〉 사업체의 지역농업 생산과 소비에 대한 의견

단위: %

	지역 생산 농산물은 안전하다	농산물의 지역 내 유통 희망	지역산 구매는 생산자에 도움	비싸도 지역농산물 구매함	비싸도 지역 가공품 구매	고령/중소농 판매시장 필요	생산자에 안정적인 소득 필요	지역농산물 타지역에 홍보 희망
계	7.72	8.19	8.22	5.89	5.83	7.84	8.25	8.09
청양군	6.92	7.38	7.44	4.04	4.10	7.42	7.60	7.18
완주군	8.43	9.27	9.25	7.69	7.55	8.58	9.31	9.12
유성구	7.84	7.94	8.00	5.96	5.88	7.53	7.86	7.98

주: 10점 척도(0: 전혀 아니다, 5: 보통, 10: 매우 그렇다)로 조사

4.4. 조사 결과 요약

○ 사례지역 생산자

- 쌀을 포함한 먹거리 금액을 기준으로, 농가의 먹거리 자급률은 35%이다.
- 생산자의 80% 이상은 ‘로컬푸드’를 인지하고 있다. 로컬푸드의 장점으로 가격이 높아 ‘농산물의 제값 받기’가 가능하다는 점을 꼽는다.
- 로컬푸드에 출하 의향은 30대 이하는 100%, 50~60대는 80%로 높다. 40대는 ‘출하처가 확실히 있다면 생산에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을 꼽는다.
- 생산자의 연령 70대 이상은 소량 다품목을 출하할 수 있는 로컬푸드에 대한 기대가 높다. 다만, 구매자 입장에서는 지역산일지라도 가격이 비싸면 구매할 의향은 농촌형이 상대적으로 낮다.

○ 사례지역 소비자

- 소비자의 85%는 주 1회 이상 장을 보고, 19%는 텃밭이나 주말농장에서 직접 재배한다. 또한 약 50%의 소비자가 친인척에게 농산물을 조달받으며, 농촌형일수록 그 비율이 높다.
- 소비자가 로컬푸드 직매장을 이용한 경험은 완주군 49%, 유성구 32%, 청양군 28%로 높다. 로컬푸드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 소비자는 지역농산물 소비의 장점을, ‘품질’, ‘안전성’, ‘지역경제에 도움’

순으로 인지하고 80% 이상이 지역농산물 유통을 희망한다.

○ 사례지역 사업체

- 사업체의 먹거리 구매처는 시장 구매가 평균 58%, 유통업체는 개인 도매 업체 이용이 높고, 지역 푸드플랜의 필요성은 86%가 공감한다.
- 사업체가 지역 농축산물을 이용하는 데 어려운 점으로는 지속적인 공급 과 구매처 부족, 높은 가격이 있다.
- 사업체는 지역 내 유통을 희망하고 지역산 구매가 생산자에게 도움이 될 것을 알지만 가격에 대해서는 매우 민감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먹거리 안전성 인식 비교

- ‘먹거리가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사업체가 가장 높고, 생산자와 소비자는 비슷한 수준으로 ‘비교적 안전’하다고 인식한다. 반면, 농축산물보다 가공식품에 대한 안전성이 낮다.
- ‘거주지 인근 지역’이 안전한 농축산물 생산지라는 인식은 소비자보다 사업체, 생산자의 순으로 응답 비율이 높다.
- 생산자는 농촌형, 연령이 높을수록 안전하다고 인식하지만, 소비자는 연령이 낮고 농촌 소비자일수록 불안 비율이 높다.
- 농약·항생제, 첨가물 등 생산·가공과정의 위협요인에 대해 사업체가 가장 민감하게 인식하고, 생산자보다 소비자가 더 민감하게 인식한다.

○ 지역농업에 대한 인식

- 생산자가 지역에서 생산된 것이면 대체로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농촌형일수록 높고, 지역농산물의 지역 유통을 희망하는 비율도 80%에 이른다. 또한 농산물의 ‘판매’가 원활히 진행되어 ‘안정적인 소득’을 얻는 것에 가장 관심이 높다.
- 소비자는 생산자보다 ‘지역농산물이 안전’하다고 인식하지만, 연령이 낮을수록 가격이 비싸면 구매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높다.

제 3 장

지역 푸드플랜 현황과 기대효과

- 지역 푸드플랜은 지역 내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과정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지역 먹거리경제의 선순환 구조, 즉 로컬푸드 실현을 위해 서로 연계의 필요성을 느끼고 연대 방안을 찾아가는 구조이다.
 - 먹거리 물류·유통을 가급적 지역산 로컬푸드로 하는 하부구조와 지역 내 유통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서로 상이한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구조인 거버넌스를 상부구조로 가진다.

- 지역 푸드플랜의 사업범위는 로컬푸드 직매장, 꾸러미사업, 학교 및 공공급식 등 다양한 유통형태와 생산 및 가공사업, 도농교류와 식농교육을 위한 농업·농촌 체험·관광을 포함한다.
 - 그러므로, 지역 푸드플랜에 대해서는 로컬푸드 출하 생산자의 추가소득 이외에도 먹거리 공공시장에 접근성을 높이는 물류 서비스와 농식품 가공 활성화 등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 지역농업의 지속성과 유연성 증가 등 지역경제에 활력을 주는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다만,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한계로 지역 푸드플랜의 기대효과를 다음 4가지 방식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첫째, 선행연구 조사결과를 활용하여 로컬푸드 직매장이 지역경제에 유

발하는 생산자 소득증가, 지역소비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직접적인 경제효과

- 둘째, 농식품 가공업, 급식 물류 서비스에서 일자리 창출을 비롯한 가공 및 급식센터의 운영 효과
- 셋째, 3개 사례 지역에서 2020년 푸드플랜이 순차적으로 운영될 경우, 로컬푸드 직매장과 가공 및 급식센터 등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정량적 효과
- 넷째, 선행연구에서 로컬푸드 직매장 관련주체의 설문을 통한 지역농업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정성적 효과 분석 등이다.

1.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효과⁴

- 로컬푸드 직매장의 경제성은 생산자와 소비자, 지역경제에 미치는 편익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⁵
 -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주체, 생산자, 소비자 조사 결과에서 수치로 환산 가능한 부분을 직접 효과로 분류하고, 운영주체 및 생산자, 소비자의 태도나 의식 조사에서 나타나는 로컬푸드의 효과를 간접효과와 지역농업 파급효과로 구분하였다<표 3-1>.
 - 본 절에서는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으로 인한 직접적인 경제 효과인 ① 생산자의 소득증가, ② 생산자의 지역 소비지출 증가, ③ 직매장에 고용 등을 살펴본다.

4 정은미 외. 2016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로컬푸드 추진 전략과 정책과제』 제5장 참조 KREI..

5 로컬푸드 직매장 관련주체 조사는 3가지 유형별 2개 직매장을 선정하여 생산자 200명, 소비자 314명을 조사하였고, 전국 117개 로컬푸드 직매장 중 중복 운영을 제외한 98개소 중 61개소의 운영주체가 응답하였다. 조사시기는 2016년 8~9월이다.

〈표 3-1〉 로컬푸드 직매장 사업의 경제적 효과

주체	항목	근거자료	
직접 효과	생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취가격 증가 → 농업소득 증가 - 유통단계 축소 → 운송비 절감(사회적 비용 절감) - 소량, 비규격품 판매 가능 → 농업소득 증가(상품화율 증가) - 생산자가 가격·공급량 결정 → 농업소득 증가(가격결정권 확보) 	(생산자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농산물 판매액, 로컬푸드 출하비율 • 출하처 변화 • 소득안정 및 소득 증가율(직매장 운영주체 조사) • 생산자 구성, 경영규모 비율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내 소비 지출 증가 • 고용인 일자리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자 소비 지출 • 운영주체: 고용자 수
간접 효과	생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자 자존감 상승 • 잉여 농산물의 상품화 시도 • 중소 고령농의 생산적 복지 실현 • 지역 특성에 맞는 품목, 작기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주체, 생산자 설문조사
	소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자 잉여 증가 : 최소비용으로 신선농산물 구매 가능 • 지역농산물 이용 증가 • 지역농업 응원 및 홍보 의향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주체, 소비자 설문조사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성 강화 → 친환경으로 전환 • 지역 전통 식문화 복원 → 관광 상품 • 지역 소규모 가공식품 사업 증가 • 소비자 교류를 체험 관광으로 전환 • 유통 관련 일자리 창출, 특히 중소, 고령농 소득 발생은 지역경제 활력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자, 소비자 설문조사

자료: 정은미 외(2016).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로컬푸드 추진 전략과 정책과제』. KREI.

1.1. 생산자의 소득 증가 효과

- 생산자의 소득 증가 규모는 생산자 조사결과에서 경영규모별(소, 중소, 중, 중대, 대규모)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 로컬푸드 출하 비율, 농업소득 증가율을 로컬푸드 직매장 입지별로 구분하여 산출하였다.

- 그 결과, 생산자의 소득은 대도시 인근 직매장 연간 6억 8천만 원, 중소도시 인근 직매장 연간 4억 7천만 원, 농촌지역 직매장 연간 2억 8천만 원이 증가하였다<표 3-2>.

〈표 3-2〉 직매장 입지별 생산자 소득 증가 산출

단위: %, 명, 만 원

	구성비	평균 출하자 수(A)	로컬 출하 소득 증가분	소득 가산 또는 감산(B)	생산자 소득 증가		
					(A×B)	비율	
대도시 인근	소농	55.4	88	225.8	248.3	21,876	32.1
	중농	34.6	55	296.1	325.8	17,921	26.3
	대농	10.0	16	1626.1	1788.7	28,440	41.7
	소계	100.0	159	-	-	68,237	100.0
중소 도시 인근	소농	46.8	48	225.8	225.8	10,883	23.0
	중농	38.4	40	296.1	296.1	11,713	24.8
	대농	14.7	15	1626.1	1626.1	24,620	52.1
	소계	100.0	103	-	-	47,216	100.0
농촌 지역	소농	58.2	45	225.8	203.2	9,106	32.4
	중농	30.5	23	296.1	266.5	6,259	22.3
	대농	11.3	9	1626.1	1463.4	12,733	45.3
	소계	100.0	77	-	-	28,099	100.0

자료: 정은미 외(2016).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로컬푸드 추진 전략과 정책과제』. KREI.

- 생산자의 소득 증가는 ① 출하처 변경으로 인한 증가, ② 상품화율 증가에 의한 증가, ③ 가격결정권 주도에 따른 증가 3가지 효과로 구분하였다.
 -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 전과 후를 비교하여 생산자의 소득 증가율, 출하처 변경, 상품화율 증가를 조사하였다.
- 출하처 변경으로 인한 소득 증가는 출하처 비율 변화에서 제반 비용의 절감액이다. 수송비나 중간상인의 이윤을 감안하여 비용 절감액은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지역 각각 출하액의 10%, 15%, 20%로 가정하였다<표 3-3>.
 - 출하처 변경으로 인한 생산자의 소득 증가액은 대도시 직매장 연간 2억 3천 449만 원, 중소도시 직매장은 연간 2억 2천 375만 원, 농촌지역 직매장 연간 1억 9천 485만 원이다.⁶

6 정은미 외. 2016.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로컬푸드 추진 전략과 정책과제』. KREI. p. 111.

〈표 3-3〉 출하처 변경에 따른 절감액 산출(대도시 인근 직매장 사례)

단위: %, 만 원

경영 규모	도매시장			중간상인			개별 직거래		
	출하 감소율	출하 감소액	비용 절감액	출하 감소율	출하 절감액	비용 절감액	출하 감소율	출하 절감액	비용 절감액
대	19.9	3,410	341	0.7	120	12	8.5	1,456	146
중대	22.2	1,641	164	3.1	229	23	8.4	621	62
중	14.3	674	67	9.6	453	45	19.2	906	91
중소	13	353	35	7.3	198	20	17.4	473	47
소	18.8	489	49	12.9	335	34	8.0	208	21

자료: 정은미 외(2016).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로컬푸드 추진 전략과 정책과제』. KREI.

- 상품화율은 생산자 조사에서 출하처 중 ‘해당 없음’을 소량 생산 또는 비상품으로 간주하여 해당 항목의 감소를 상품화율 증가로 산출하였다.
 - 상품화율이 증가한 비율은 소농 12.2%, 중농 5.6%, 대농 7.9%이다. 상품화율 증가로 인한 생산자의 소득 증가액은 대도시 직매장 연간 5천 896만 원, 중소도시 직매장은 연간 3천 911만 원, 농촌지역 직매장 연간 2천 458만 원이다.⁷
- 가격결정권 주도에 따른 생산자 소득 증가는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로 얻은 총소득 증가율에서 출하처 변경과 상품화율 증가에 의한 소득 증가를 뺀 값으로 가정하였다.
- 그 결과, 생산자의 소득 증가를 3가지 요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표 3-4>와 같다.
 - 대도시 인근 직매장에 출하하는 생산자는 가격결정 주도로 인한 소득 증가가 57%로 가장 크다.
 - 반면, 농촌지역 직매장에 출하하는 생산자는 출하처 변경으로 인한 비용 절감이 69%로 크게 나타난다.

7 정은미 외. 2016.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로컬푸드 추진 전략과 정책과제』. KREI. p. 113.

〈표 3-4〉 생산자 소득 증가액의 구성요소별 비교

단위: 만 원, %

		출하처 변경 비용절감 (A)		상품화율 증가로 소득증가 (B)		가격결정 주도 소득증가 (C)		총소득 증가액 (A+B+C)
		절감액	비율	증가액	비율	증가액	비율	
대도시 인근	소농	9,095	41.6	2,669	12.2	10,113	46.2	21,877
	중농	8,410	46.9	995	5.6	8,517	47.5	17,921
	대농	5,944	20.9	2,234	7.9	20,263	71.2	28,440
	소계	23,449	34.4	5,896	8.6	38,892	57.0	68,237
중소 도시 인근	소농	6,964	64.0	1,328	12.2	2,591	23.8	10,884
	중농	7,707	65.8	650	5.5	3,356	28.6	11,714
	대농	7,704	31.3	1,933	7.9	14,983	60.9	24,620
	소계	22,375	47.4	3,911	8.3	20,931	44.3	47,216
농촌 지역	소농	8,321	91.4	555	6.1	229	2.5	9,106
	중농	5,562	88.9	347	5.5	350	5.6	6,259
	대농	5,602	44.0	1,000	7.9	6,132	48.2	12,733
	소계	19,485	69.3	1,902	6.8	6,711	23.9	28,099

주: 총소득 증가액은 〈표 3-2〉에서 인용함.

자료: 정은미 외(2016).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로컬푸드 추진 전략과 정책과제』. KREI.

1.2. 로컬푸드 직매장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1.2.1. 생산자의 지역 소비지출 증가

○ 생산자는 소득이 증가한 만큼 지역 내에서 소비지출⁸이 소농 13.9%에서 대농 16.4%까지 늘었다고 응답하였다. 이 중 생산자의 지역 소비지출을 50% (대농 20%)로 가정하여 지역 소비지출 증가액을 산출하였다.

- 생산자 소득 증가로 인한 지역 내 소비지출의 증가는 대도시 직매장 1.6억 원, 중소도시 직매장은 1억 원, 농촌지역 직매장 6천만 원이다.⁹

8 고령농업인의 경우, 손자녀에게 주는 용돈 비중이 크므로 이를 소비지출로 가정함.

9 정은미 외. 2016.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로컬푸드 추진 전략과 정책과제』. KREI. p. 116.

1.2.2. 일자리 창출 효과

- 로컬푸드 직매장의 일자리 창출로 인한 고용 효과는 직매장의 연평균 고용인 수에 연평균 급여를 차등하여 산출하였다.
 - 고용인의 연평균 급여는 대도시 인근 직매장 2천 2백만 원, 중소도시 인근 직매장 2천만 원, 농촌지역 직매장 1천 8백만 원을 적용하였다.
 - 직매장의 연간 고용 효과는, 대도시 직매장 1억 8천만 원, 중소도시 직매장 연간 1억 7천만 원, 농촌 직매장 연간 1억 2천만 원이다.¹⁰

1.2.3. 로컬푸드 직매장의 정량 효과 총괄

- 로컬푸드 직매장의 직접 경제적 효과는, 대도시 직매장은 연간 10억 3천만 원, 중소도시 직매장은 연간 7억 4천만 원, 농촌지역 직매장은 연간 4억 7천만 원의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효과가 있다<표 3-5>.

<표 3-5> 로컬푸드 직매장의 연간 지역경제 파급 규모

단위: 명, %, 만 원

		생산자 소득 증가액 (A)	생산자의 연간 지역 소비 증가액 (B)	생산자소득 + 소비지출 (A+B)		고용 효과 (일자리 창출) (C)	지역경제 파급효과 (A+B+C)
					구성 비율		
대도시 인근	소농	21,877	7,575	29,452	34.8	18,480	103,085
	중농	17,921	4,786	22,707	26.8		
	대농	28,440	4,007	32,447	38.4		
	소계	68,237	16,368	84,605	100.0		
중소 도시 인근	소농	10,884	3,731	14,615	25.4	16,600	74,078
	중농	11,714	3,097	14,811	25.8		
	대농	24,620	3,434	28,054	48.8		
	소계	47,216	10,262	57,478	100.0		
농촌 지역	소농	9,106	3,083	12,189	35.3	12,420	46,991
	중농	6,259	1,635	7,894	22.8		
	대농	12,733	1,754	14,487	41.9		
	소계	28,099	6,472	34,571	100.0		

자료: 정은미 외(2016).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로컬푸드 추진 전략과 정책과제』. KREI.

10 정은미 외. 2016.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로컬푸드 추진 전략과 정책과제』. KREI. p. 117.

2. 가공 및 급식센터 운영 효과

2.1. 농산물 가공센터 설립 계기와 추진

- 국민소득 증가와 함께 먹거리의 수요가 양에서 질로 변함에 따라 농업인이 직접 생산한 장류, 과일즙 등에 수요가 가시화되었고 이러한 환경 변화에 따라 농업인이 식품가공에 참여하는 경우가 증가하였다.
 - 농업인이 소규모 식품가공업에 참가할 경우 위생시설 및 설비를 갖추는 문제가 어려운데, 시군 지자체가 「식품위생법」의 시설기준을 갖춘 식품가공 작업장을 운영함으로써 농업인의 가공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농산물 가공 교육 장비를 설치하고 ‘농식품 창업보육 프로그램’ 등 농업인 교육을 지원한다. 아이디어는 있으나 가공시설을 갖추지 못한 농업인이 공동 가공시설을 이용하여 시제품을 생산하고 상품화하도록 시설과 기술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 2000년, 경북 문경시는 식품가공 창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에게 소규모 가공사업의 창업부터 자립경영 단계까지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농산물가공지원센터’를 설립하였다.
 - 전북 완주군은 2007년 지역농업 활성화 차원에서 가공시설을 설치하고 해당 시설의 운영과 관리의 단일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였다.
 - 그 밖에도 농업인의 소규모 가공을 지원하는 기초지자체가 늘고 있다.

2.2. 학교 및 공공급식지원센터 설립 계기와 추진

- 기존 학교급식은 입찰을 통한 계약이 원칙이어서 소량의 지역농산물이 공급되기 어려웠다. 그러나 학교급식에 지역산 농산물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되면서 지자체가 직영하는 학교급식센터가 늘고 있다.
 - 「학교급식법」에 따라 각 지자체는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

고 안전하고 우수한 식자재가 학교에 공급되도록 지원한다. 또한 지역산 식재료 구매를 권장하기 위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기도 한다.

-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지역농산물을 이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 건강증진 효과를 기대한다.
- 공공급식지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최상위계층, 「아동복지법」과 「노인복지법」에 따른 아동과 노인 등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층에게 지역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공공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사례이다.
 - 2018년 2월 현재, 공공급식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 지역은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성남시, 충남 부여군, 전북 완주군 등 5개 지역에 불과하다.
 - 공공급식지원센터는 전북 완주군이 유일하게 설립하여 운영한다.

2.3. 사례 지역의 가공센터 및 급식센터 현황

2.3.1. 청양군

- 청양군은 농산물 종합가공센터로서 ‘부자농촌지원센터’를 직영한다. 구기자 가공 및 상품화를 위한 창업 보육센터와 함께 운영하는 가공시설이다.
 - 구기자, 맥문동, 아로니아 등 지역특산물 유통전문 판매업을 위한 사무실과 부대시설 등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 지원센터는 업무총괄 및 가공인력 등 총 3명이 근무하며 농업인 10호가 입주하여 유통판매에 종사한다.
- 농민가공센터는 2018년 하반기에 준공하여 가동할 예정이다.
 - 가공창업 아카데미 교육은 2017년부터 시작하여 35명이 이수하고 30개 시제품을 생산하였다.

- 학교급식센터는 2014년부터 청양유기농영농법인에 위탁 운영으로 시작했으나 2018년부터 군 직영체제로 전환하였다.
 - 생산자단체에게 위탁한 방식에서는 소량 다품목의 지역농산물을 원활히 공급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며 유통업체에 위임하는 기존 방식과 동일하게 진행되었다. 이에 청양군은 학교급식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2018년 3월부터 청양군 공무원 2명과 기간제 2명을 파견하여 직영하고 있다.

2.3.2. 완주군

- 완주군은 2012년, 2015년에 각각 ‘거점농민가공센터’ 2개소를 건립하여 완주군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다.
 - 가공센터 담당부서는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이며, 가공에 관한 교육과 농업인 가공의 2부분으로 구성된다. 가공은 반찬류, 습식류, 건식류, 제과제빵 등 200여 개 품목을, 4개 공동체의 176명이 협동조합에 참여하여 생산하고, 가공기술 향상을 위한 8개 교육 과정을 225명이 수료하였다.
 - 운영 인력은 센터 총괄 운영팀장 1명과 각 센터에 행정과 교육 담당 2명 등 총 5명이며, 시설 운영에 연간 4억 4,500만 원이 소요된다.

〈표 3-6〉 완주군 농민가공센터 개요

구 분	고산 로컬푸드 가공센터	구이 로컬푸드 가공센터
위 치	고산면 고산천로 854-25	구이면 모악산길 24
규 모	총면적(4,469㎡), 공장(613.7㎡)	총면적(2,756㎡), 공장(494.3㎡)
운영시기	2012년 6월	2015년 5월부터
운영예산	241,932천 원	203,072천 원
추진사업	시군공동 제조가공시설사업(농진청)	농식품 6차산업화 사업(농식품부)
소요예산	12.8억 원	12.6억 원
운영인력	운영팀장 1명(총괄)와 각 센터에 2명(행정, 교육매니저)	
공간구성	반찬, 습식, 건식, 제과제빵, 교육장	반찬, 습식, 건식, 건조, 교육장
증축시설	저온창고(2014), 휴게실(2015)	

자료: 완주군청 내부자료.

- 가공센터를 이용하는 농업인은 협동조합 2개, 영농법인 1개, 주식회사 1개 등이 부분 임대 형태로 행정재산 사용허가를 받아 이용한다.
 - 2013년부터 누적 매출액은 34억 원(연평균 약 5억 원) 중 농업인이 수취한 금액은 26억 원이다. 매년 가공품목 수와 물량이 증가하고 있다.
- 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의 자회사 소이푸드 ‘콩 종합가공시설’
- 조합원 800명이 출자하고 자회사 (주)푸드스테이션이 운영하는 두유생산 시설이다. 두유는 지역의 콩 생산을 늘려 농가소득을 높이고 지역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두 가지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 전두유 3종(일반, 꿀두유, 생강두유)을 연간 24만 병 생산하는데 원료콩은 200여 농가와 계약재배한다.
- (재)온고을 로컬푸드 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
- 2013년 ‘로컬푸드 공공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 후, 비영리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2014년 2월에 공공급식 공급부터 시작하였다.
 - 2015년 3월 완주교육청과 업무협약으로 학교급식에 지역산 식재료 공급, 2017년 5월 ‘서울시 도농상생 공공급식사업’ 추진 업무협약으로 강동구의 공공급식에 공급한다. 물류 이외에도 학교, 어린이집, 서울시 등 공공 학교급식 관계자의 생산현장 체험도 실시한다.
 - 이 센터는 로컬푸드 정책·유통·물류기능을 통합적으로 제어하는 컨트롤 타워형 운영이다. 출하자 200농가와 관리·운영에 27명이 근무한다.

2.3.3. 대전 유성구

- 2015년 준공된 ‘희망마을 가공지원센터’는 로컬푸드 상품개발과 가공에 관한 교육을 지원한다.
- 연간 운영비는 72백만 원이며, 2016년 이후 로컬푸드 상품개발 67종, 가공지원 교육 90강 이상을 수행한다.

-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가공 관련 기술교육, 창업교육, 공동체 활동 등 다양한 로컬푸드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청년 및 경력단절여성 대상 먹거리 관련 교육 및 가공기술 교육으로 직매장, 급식 등 지역 먹거리 체계 관련 일자리를 제공한다.
 - 2016년 이후 로컬푸드 관련 취업은 직매장 30명, 유통 관련 22명과 창업 11개소이며, 창업은 OB연구소, 육지해녀, 팍팍, 청년 소셜플랫폼, 열린부뚜막 등 청년 및 경력단절여성 창업 일자리 창출이 주요 내용이다.
- 유성구는 2018년 6월 준공 예정인 ‘식품파일럿플랜트 및 통합물류지원센터’를 통해 학교급식이나 공공급식을 지원할 예정이다.
- 통합물류지원센터는 대전지역 로컬푸드 및 인근지자체 우수농산물 공급을 위해 냉장, 냉동 및 배송차량, 콜드체인 시설 등을 구축한 물류센터이다.
 - 당 센터는 로컬푸드 직매장을 비롯하여 학교급식, 공공급식에 필요한 식재료를 소분 포장하고 당일 배송하는 체계로서 정상 가동 시 필요한 인력은 20명으로 예상된다.

2.4. 부가가치 향상 및 일자리 창출 효과

- 지자체가 지역농산물을 식재료로 농산물가공센터나 공공학교급식센터를 직영하는 경우 직접적인 효과는 일자리 창출과 생산자 소득 증가 효과이다.
- 농산물 가공센터는 농업인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원료로 이용하여 가공상품을 생산한다.
- 가공은 품위나 품질이 떨어지는 농산물로도 가능하며 1차 농산물로 판매할 때보다 부가가치가 크다.
 - 농업인이 직접 가공에 참여하여 가공상품으로 판매할 경우 부가가치는 30~40%(가공 인건비 포함)에 이른다.

- 공공학교급식센터에 지역농산물과 가공식품을 공급하는 경우, 농업인뿐만 아니라 마을기업, 사회적경제 등 생산조직과 먹거리 관련 창업 및 고용 증가 등 지역 일자리 창출과 가공에 대한 생산자의 부가가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 예를 들면, 완주군 7개 마을공동체에서 35명이 두부 생산에 참여하며 로컬푸드 직매장과 공공급식센터에 공급한다.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판매되는 두부는 월평균 75백만 원, 공공급식센터는 월평균 10백만 원으로 7개 마을공동체 두부의 월평균 매출액은 85백만 원(마을당 12백만 원)이다.

3. 지역 푸드플랜의 정량적 효과

3.1. 완주군 사례로 본 지역경제 파급효과

- 지역 먹거리 정책 10년의 경험이 있는 완주군의 사례에서 각 사업별 매출액을 근거로 한 대략적인 지역경제 파급효과 산출은 다음과 같다.
 - 지역경제에 직접적인 경제효과를 ① 생산자 소득 증가, ② 생산자의 연간 지역 소비 증가, ③ 일자리(고용) 효과로 산출하였다.

〈표 3-7〉 완주군 로컬푸드 공급사업의 연간 지역경제 파급 규모

단위: 명, %, 백만 원

	연간 매출액	일자리 수	생산자 소득증가액 (A)	생산자의 연간 지역 소비 증가액 (B)	일자리(고용) 증가 효과 (C)	지역경제 파급효과 (A+B+C)
직매장	50,547	77	5,055	253	1,540	6,848
농민가공센터	600	5	180	9	100	289
공공학교급식센터	5,494	27	549	27	540	1,116
농가레스토랑	1,171	24	117	6	480	603
꾸러미	804	10	80	4	200	284
계	58,566	143	5,981	299	2,860	9,140

주 1) 생산자 부가가치는 직매장 및 농가레스토랑, 꾸러미, 공공학교급식센터 10%, 가공 30%를 적용함.

2) 생산자의 연간 지역 소비 증가액은 생산자 소득증가액의 5%로 산정함.

3) 일자리는 현재 고용인력, 직급에 관계없이 연평균 급여는 2천만 원으로 산정함.

자료: 완주군청 내부자료.

- 2017년 완주군 로컬푸드 사업 결과를 통해 살펴본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총 91억 원에 이른다<표 3-7>.
 - 직매장 매출 505억 원으로 인해 생산자 소득 증가액은 50억 원, 소득 증가액 중 5%를 지역 소비 증가액으로 볼 때 2.5억 원, 경제 고용인력 77명의 급여 15억 원을 포함하면 지역경제에 총 68억 원의 효과가 발생한다.
 - 농민가공센터는 연간 6억 원의 매출 중 가공생산자의 인건비를 포함한 부가가치 30%를 설정하면 생산자 소득 증가액은 1.8억 원이고, 가공으로 인한 고용효과는 1.1억 원으로 지역경제에 연간 3억 원의 효과가 있다.
 - 공공학교급식센터는 연간 55억 원의 매출 규모에서 생산자 소득 증가 효과가 5.5억 원이지만, 관리·운영에 27명이 근무하여 6억 원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고 지역경제에 총 11.2억 원의 효과를 발생한다.
 - 농가레스토랑은 로컬푸드 직매장과 연계·운영하며 생산자 소득증가 1.2억 원을 비롯하여 고용효과 4.8억 원 등 지역경제에 총 6억 원의 효과를 가져온다.
 - 꾸러미 사업은 연간 매출 8억 원이 생산자의 소득증가 8천만 원과 운영인력 10명의 인건비 2억 원 등 약 3억 원의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3.2. 생산자 소득증가 효과

- 2020년 지역 푸드플랜 가동을 가정하고, 로컬푸드 직매장, 가공센터, 공공학교급식센터, 농가 레스토랑 등 4개 사업 범위를 중심으로 생산자 소득, 생산자의 지역 내 소비 증가, 일자리 창출 3개 측면에서 기대효과를 살펴본다.
 - 청양군, 유성구는 로컬푸드 사업이 초기 단계이지만 각 지역 관련주체(생산자, 소비자, 사업체) 조사에서 푸드플랜에 대한 기대와 참여 의향이 높기 때문에 완주군 로컬푸드 경험과 비슷한 발전과정이라고 가정한다.

〈표 3-8〉 지역별 생산자의 소득 증가 기대효과

단위: 백만 원

		청양군	완주군	유성구	비고
직매장	개설 가능 직매장 수(A)	5개소	12개소(현재)	9개소	2018년 조사
	개소당 월 출하 생산자 수	77	103	159	2016년 연구결과
	개소당 생산자의 연간 소득증가분(B)	281	472	682	2016년 연구결과
	생산자 소득증가 효과(C=A×B)	984	3,963	4,297	중복 출하 30% 가정
가공센터	연간 가공식품 매출 규모	200~300	550~1,200	750~1,500	2018년 조사
	생산자 부가가치 증가 효과(D)	60~90	165~360	225~450	매출의 30% 가정
공공학교 급식센터	연간 공공성 먹거리 소비 규모	4,940	28,423	86,027	2018년 조사
	취급 규모	988	5,685	17,205	2018년 조사
	(공공성 시장의 최소 20%~ 최대 30%)	~1,482	~8,527	~25,808	
	생산자 소득증가 효과(E)	99~148	568~853	1,721~2,581	매출의 10% 가정
계(C+D+E)		1,143~1,222	4,696~5,176	6,243~7,328	

- 생산자가 직매장 출하에서 얻는 소득 증가 기대효과는, 생산자가 로컬푸드 직매장으로 출하처를 변경하거나 직접 가격결정을 주도하고 비상품도 거래 가능하여 소득이 증가하는 효과이다.
 - 사례 지역 현지 조사를 통해 최대 개설 가능한 직매장 수를 설문·계측하고, 이를 기초로 2016년 연구 결과의 로컬푸드 직매장 유형별 생산자 소득 증가분을 사례 지역에 대입하여 산출하였다.
 - 청양군은 5개 직매장에서 생산자 소득이 약 9.8억 원 증가하고, 완주군은 현재 12개 직매장에서 39.6억 원, 유성구는 9개 직매장에서 약 43억 원의 소득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 생산자가 부가가치가 높은 가공식품 출하로 소득이 증가하는 기대효과는 가공식품의 매출액 규모를 예측한 후, 매출액의 30%를 생산자의 부가가치로 산정하였다.
 - 청양군은 가공식품의 연간 매출액을 최소 2억 원에서 최대 3억 원으로 가정할 때, 생산자의 부가가치 증가 효과는 최소 6천만 원에서 최대 9천만 원으로 기대된다.
 - 완주군은 최소 현재 가공센터의 매출 6억 원에서 최대 12억 원으로 가정

- 할 때, 생산자의 부가가치 증가 효과는 최소 1.6억 원에서 최대 3.6억 원으로 기대된다.
- 유성구는 가공식품의 연간 매출액을 최소 7.5억 원에서 최대 4.5억 원으로 가정할 때, 생산자의 부가가치 증가 효과는 최소 2.3천만 원에서 최대 4.5억 원으로 기대된다.
- 공공 및 학교급식센터가 가동되는 완주군은 5년의 경험이 축적된 반면, 청양군은 2018년부터 직영 전환하였고 유성구는 직영을 준비하는 단계이다. 그러므로 공공 및 학교급식센터의 취급 규모는 각 지자체 공공성 먹거리 소비 시장 규모의 최소 20%에서 최대 30%로 가정하고, 생산자 소득 증가 효과는 취급 매출액의 10%로 가정하여 산정하였다.
- 청양군은 공공성 먹거리 시장의 20%인 9.9억 원에서 최대 15억 원의 매출을 달성할 경우 생산자가 소득 증가는 최소 99백만 원에서 최대 1.5억 원으로 기대된다.
 - 완주군은 현재 공공학교급식센터 매출액이 55억 원 규모로 약 20%에 가깝다. 앞으로 지역 공공성 먹거리 시장의 최대 30%인 85억 원까지 취급 규모를 늘린다면, 생산자 소득 증가 효과는 최소 5.6억 원에서 최대 8.5억 원으로 기대된다.
 - 유성구는 공공성 먹거리 시장이 860억 원으로 매우 크고 지역농산물만으로 공급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공공학교급식센터가 가동되면, 지역농산물 외에도 인근 지역과 협력하여 공급을 정비해야 할 것이다. 생산자의 소득 증가 효과는 최소 17억 원에서 최대 26억 원으로 기대된다.
- 이와 같은 산정 결과, 지역 푸드플랜 가동으로 직매장과 가공센터, 공공학교급식센터가 가동될 경우, 생산자가 얻는 총 소득증가 효과는 다음과 같다.
- 청양군 최소 11억 원에서 최대 12억 원
 - 완주군 최소 47억 원에서 최대 52억 원
 - 유성구 최소 62억 원에서 최대 73억 원

3.3. 생산자의 지역 소비 증가 효과

- 지역 푸드플랜으로 생산자의 소득이 증가하면, 그 생산자가 지역에서 소비하는 소비액(손자녀 용돈, 저축 포함)도 증가한다고 가정하였다.
 - 실제 로컬푸드 직매장에 출하하는 생산자는 지역에서 소비지출이 13% 증가하였고 70대 이상은 손자녀 용돈이나 저축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생산자의 지역 소비 증가 효과는 생산자가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 가공센터에서 가공상품 생산, 공공학교급식 출하의 3가지 유형을 적용하여 산정하였다.

- 로컬푸드 직매장에 출하하는 연간 생산자의 지역 소비 증가액은 2016년 연구 결과를 활용하였다. 로컬푸드 직매장이 위치하는 지역별 생산자의 소득 증가분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비율은 농촌 22.8%, 도농복합지역 21.8%, 도시지역 24%이고, 생산자의 중복을 30%로 가정하여 각 지역에 대입하였다.
 - 청양군은 개설 가능 직매장이 5개소이므로 생산자가 소득 증가분 중 약 2.3억 원을 지역에서 추가 소비할 것으로 기대된다.
 - 완주군은 현재 12개소를 기준으로 생산자는 소득 증가분 중 약 8.6억 원을 지역에서 추가적으로 소비할 것으로 기대된다.
 - 유성구는 직매장 9개소에서 생산자 소득 증가분의 약 10억 원을 지역에서 추가적으로 소비할 것으로 기대된다.

- 가공센터에서 연간 생산자의 부가가치 증가분 중 10%가 지역에서 소비 증가로 나타난다고 가정하였다.
 - 그 결과, 청양군은 최소 6백만 원에서 최대 9백만 원까지 지역에서 소비가 증가하며, 완주군은 최소 17백만 원에서 최대 36백만 원, 유성구는 최소 23백만 원에서 최대 45백만 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표 3-9〉 지역별 생산자 소득 증가분에 따른 지역 소비 증가 기대효과

단위: 백만 원

		청양군	완주군	유성구	비고
직매장	개설 가능 직매장 수(A)	5개소	12개소 (현재)	9개소	2018년 조사
	개소당 생산자의 연간 소득증가분	281	472	682	2016년 연구결과
	생산자 소득증가분의 지역소비 증가율	22.8%	21.8%	24.0%	2016년 연구결과
	개소당 연간 생산자의 지역소비 증가액(B)	64	103	164	2016년 연구결과
	생산자의 지역 소비 증가 효과 (C=A×B)	227	862	1,031	중복 출하 30% 가정
가공센터	연간 생산자 부가가치 증가 규모	60~90	165~360	225~450	2018년 조사
	생산자의 지역 소비 증가 효과(D)	6~9	17~36	23~45	부가가치 증가액의 10% 가정
공공학교 급식센터	연간 생산자의 소득 증가액	99~148	568~853	1,721~2,581	2018 조사
	생산자의 지역 소비 증가 효과(E)	10~15	57~85	172~258	생산자 소득 증가액의 10% 가정
계(C+D+E)		243~251	936~983	1,226~1,334	

- 공공 및 학교급식에 출하로 기대되는 연간 생산자의 소득 증가액 중 약 10%가 지역에서 소비 증가로 나타난다고 가정하였다.
 - 그 결과, 청양군은 최소 10백만 원에서 최대 15백만 원, 완주군은 최소 57백만 원에서 최대 85백만 원, 유성구는 최소 1.7억 원에서 최대 2.6억 원의 지역 소비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와 같은 산정 결과, 지역 푸드플랜 가동으로 직매장과 가공센터, 공공학교 급식센터가 가동될 경우, 생산자의 소득 증가에 따라 생산자가 지역에서 추가 소비지출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
 - 청양군 최소 2.4억 원에서 최대 2.5억 원
 - 완주군 최소 9.4억 원에서 최대 9.8억 원
 - 유성구 최소 12.3억 원에서 최대 13.3억 원

3.4. 지역 내 일자리 창출 효과

- 지역 푸드플랜 관련 일자리는 생산기획, 농가조직화, 농업인 가공 활성화 등 기초 인프라 구축 후 실행조직의 일자리, 실무조직의 최소 인원을 말한다.
 - 본 연구에서 완주군은 현재 시점, 청양군과 유성구는 2018년부터 푸드플랜을 추진할 경우 2020년 하반기에 일자리 창출 효과를 달성할 것으로 가정하였다.

〈표 3-10〉 지역별 푸드플랜 사업에 따른 일자리 창출 기대효과

단위: 명

	청양군	완주군	유성구	비고
직매장 총 일자리(A)	25명	72명	63명	최소 실무인력, 농촌 5명, 복합 6명, 도시 7명
레스토랑(B)	2개소	5개소	5개소	2020년 가정
	12명	40명	50명	
가공(지원센터, 마을공동체)(C)	25명	176명	120명	2020년 가정
학교급식센터(D)	18명	27명	40명	2020년 가정, 생산기획~배송, 최소 실무인원
공공 및 단체급식센터(E)	15명	25명	35명	
계 (A+B+C+D+E)	95명	340명	308명	

- 직매장은 최소 인력을 농촌 5명, 도농복합 6명, 도시 7명으로 가정하였다.
 - 그 결과, 청양군은 5개 직매장에 25명, 완주군 12개 직매장에 72명, 유성구는 9개 직매장에 63명이 근무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된다.
 - 직매장은 직매장 단독형태보다 레스토랑과 함께 운영된다면 지역민의 편의와 가공의 부가가치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
- 레스토랑은 청양군은 최소 2개소, 완주군 5개소, 유성구 5개소가 개설 가능하다.
 - 레스토랑에 필요 인원을 농촌 6명, 도농복합 8명, 도시 10명으로 가정하면, 청양군 12명, 완주군 40명, 유성구 50명의 일자리를 기대할 수 있다.

- 식품가공에 참여하는 형태는 가공지원센터와 마을공동체의 마을기업, 취·창업 지원사업 등이다. 현재 가동 중인 마을기업 및 가공식품 창업 외에도 가공센터가 가동 중인 완주는 현재 인력, 청양군과 유성구는 2020년 하반기를 가정하여 최소 실무인력을 산정하였다.
 - 청양군은 약 25명, 완주군 176명, 유성구는 120명 내외로 기대된다.
- 학교급식센터와 공공 및 단체급식센터는 2020년 하반기를 가정하고 앞 절에서 산출된 취급 규모에 따라 최소 실무인원을 산정하였다.
 - 지역산 공급을 최대한 늘린다면 청양군은 학교급식에 최소 18명이 필요하고, 완주군은 학교급식의 27명 외에도 공공 및 단체급식에 25명이 필요하다. 유성구는 학교급식 40명, 공공 및 단체급식 35명이 필요하다.
- 이와 같은 산정 결과, 지역 푸드플랜 가동으로 직매장과 가공센터, 공공학교급식센터가 가동될 경우,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
 - 청양군 95명, 완주군 340명, 유성구 308명이다. 완주군은 현재 로컬푸드 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이고, 청양군과 유성구는 2020년 하반기에 기대되는 일자리 수이다.

4. 지역 푸드플랜의 정성적 효과¹¹

- 지역 푸드플랜은 환산 가능한 경제적 효과 외에도 수치로 산출하기 어렵지만 사회경제적 변화가 시작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는 지표들이 있다.
 - 본 연구에서는 지역 푸드플랜이 경제주체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11 2016년 연구(정은미 외. 2016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로컬푸드 추진 전략과 정책 과제』 제5장. KREI)와 2018년 본 연구의 조사를 비교하였다.

4.1. 지역경제 선순환 효과

- 로컬푸드 직매장은 생산자, 소비자, 지자체가 가격을 중심으로 하는 거래 이외도 거래를 촉진하는 각종 교류를 통해 지역농업과 지역사회에 변화의 동력을 제공한다.
 -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 생산자는 출하작업을 하며 다른 생산자와 교류가 빈번해지고 지역에 이웃 시군의 소비자, 관광객의 방문으로 지역 내 유동인구가 증가한다. 지역 먹거리 사업이 확대될수록 지역특산물 가공이나 체험, 관광의 6차 산업에 관심이 늘고 농촌지역의 유희자원 활용에 관심을 갖는 귀농 및 귀촌자로 인구 유입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로컬푸드 직매장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가까운 거리에서 거래하므로 소비자의 요구가 즉각 생산에 반영되고 생산의 애로가 즉시 소비자에게 전달된다.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주체가 출하 생산자에게 안전성을 강조하며 지역농업을 친환경농업으로 유도하고, 상품 다양화를 위해 지역전통 식문화와 접목한 상품을 개발해 지역 관광성을 높이는 기회가 된다.
 - 지자체 행정에서 농업과 식품으로 이분화된 먹거리 정책이 지역 푸드플랜을 통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생산과 연계되는 방안을 찾는다. 지자체 직영 학교급식의 사례와 같이 학교급식에 출하하면서 지역 내 농산물 유통 인프라를 정비하고, 지역에서 생산 가능한 품목임에도 생산조건이 미흡한 경우는 농정의 지원사업과 연계한다.

4.2. 지역농업에 지속성 제고 효과

- 지역 먹거리는 지역 내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는 새로운 지역 유통 채널로서, 지역민 교류의 장으로 지역농업의 지속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 농업인구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농은 가족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농업경영이 중요하다. 로컬푸드는 생산자에게 다음과 같은 영향을 준다.

〈표 3-11〉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 이전과 비교한 농업경영 변화

단위: %

		경영면적 확대 의향	생산품목 증가	생산기간 연장
연령	20~30대	30.8	38.5	30.8
	40대	18.2	39.4	36.4
	50대	29.9	35.8	34.3
	60대	21.2	45.5	33.3
	70대 이상	14.3	57.1	38.1
경영 규모	대	35.7	42.9	42.9
	중대	18.5	51.9	40.7
	중	28.0	41.3	36.0
	중소	21.7	56.5	37.0
	소	15.8	18.4	21.1

자료: 정은미 외(2016).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로컬푸드 추진 전략과 정책과제』. KREI. p.121.

- 지역 푸드플랜은 지역 내 유통 채널을 통해 지역에서 필요한 상품을 지역에서 생산·공급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로컬푸드 출하 생산자는 경영면적을 확대하거나 생산품목이 늘고 생산기간을 연장하여 지역수요가 있는 품목을 생산하려고 한다<표 3-11>.
- 지역 푸드플랜은 생산자에게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며 지역농업의 지속성을 높인다. 중소농은 생활이 유지될 정도의 소득 확보를 위해서는 생산비를 보장하는 가격, 즉 농산물의 제값 받기가 중요한데, 유통경로가 짧은 지역 유통이라면 상품성이 좋기 때문에 제값 받기가 수월하다.
- 지역 푸드플랜은 취급 규모가 크지 않지만 상품 수는 500종류 이상 필요한 소매업종이다. 규모가 작은 지역이더라도 동일 수의 품목이 필요하지만 수요량은 적기 때문에 지역에서 소량 생산을 하는 중소농, 고령농이 출하하기에 적합하다. 로컬푸드는 소량 생산이 대우받고 농촌생활에 만족도를 높이며 지역농업의 지속성에 기여한다.
- 지역 푸드플랜은 지역 생산, 지역 소비라는 단순한 지역 유통에 머물지 않고 농산물 이외 지역 정보가 모이고 발산되는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역할을 하며 농촌생활에 활력소가 되어 농업의 지속성을 높인다.

- 지역 푸드플랜은 생산자의 자존감을 높이고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경제적으로 유리한 거래이다<표 3-12>.
 - 지역 푸드플랜은 생산자가 직접 가격과 공급량을 조절하며 자기결정권을 갖고 있으므로 자긍심과 만족도가 높고 가공에도 관심을 갖게 된다. 소비자는 생산에서 소비까지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최소비용으로 신선한 지역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고, 지역농업의 든든한 응원자가 된다.
 - 지역 푸드플랜의 효과는 지역사회와의 관계성에 기반한 효과로 대량유통이 간과하는 내용이며, 앞으로 지역 푸드플랜은 이러한 관계성을 확장하는 것이 과제이다.

- 로컬푸드 직매장을 운영하는 운영주체 조사(2016년)와 사례지역의 먹거리 사업체 조사(2018년)를 비교하면, 약 2년 동안 로컬푸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크게 변한 것을 알 수 있다<표 3-12, 표 3-13>.
 - 지역 먹거리 체계가 생산자의 자존감 상승에 기여한다는 응답은 7.34점(2016년 조사)에서 8.02점(2018년 조사)으로 나타났다.
 - 지역 먹거리 체계에 고령 생산자가 출하하기 적합하다는 응답은 7.50점(2018년 조사)이지만, 실제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주체는 고령 생산자의 만족도가 7.67점(2016년 조사)으로 높다고 생각한다.

〈표 3-12〉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주체가 본 지역 먹거리 체계의 효과

직매장 입지	생산자 자존감 상승에 기여	고령생산자 만족도 높음	여성생산자 만족도 높음	생산자가 가공에 관심 갖게 함	생산/소비자 경제적 혜택	안전한 생산방식 전환에 도움
계	7.34	7.67	7.97	7.15	7.85	7.80
대도시	7.46	8.15	8.23	7.69	8.31	8.31
중소도시	7.00	7.58	8.00	7.42	7.85	7.85
농촌	7.68	7.50	7.77	6.50	7.59	7.59

주: 10점 척도(0: 전혀 아니다, 5: 보통, 10: 매우 그렇다)로 조사함.

자료: 정은미 외(2016).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로컬푸드 추진 전략과 정책과제』. KREI.

〈표 3-13〉 사례지역 사업체가 본 지역 먹거리 체계의 효과

단위: %

	생산자 자존감 상승에 기여	고령 생산자 출하에 적합	여성 생산자 출하에 적합	생산자가 가공에 관심 갖게 함	생산/소비자 경제적 혜택	안전한 생산방식 전환에 도움
계	8.02	7.50	7.66	7.85	8.12	8.01
청양(농촌)	7.54	7.20	7.22	7.28	7.38	7.38
완주(복합)	8.26	7.66	8.00	8.16	8.74	8.62
유성(도시)	8.27	7.63	7.76	8.10	8.23	8.04

주: 10점 척도(0: 전혀 아니다, 5: 보통, 10: 매우 그렇다)로 조사함.

자료: 2018년 2월 조사 결과.

- 지역 푸드플랜에 여성 생산자가 참여하기 적합하다는 응답은 7.66점(2018년 조사)이지만, 실제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주체는 여성 생산자의 만족도가 7.97점(2016년 조사)으로 높다고 생각한다.
- 지역 푸드플랜이 생산자가 농산물 가공에 관심 갖게 한다는 의견에는 지역 먹거리 사업 이전에는 7.85점(2018년 조사)이지만 로컬푸드 직매장의 실제 운영주체는 7.15점(2016년 조사)으로 응답했다.
- 지역 푸드플랜이 안전한 생산방식으로 전환에 도움을 준다는 의견에는 로컬푸드 직매장의 실제 운영주체는 7.80점(2016년 조사)이지만, 2년 후에는 8.01점(2018년 조사)으로 응답하였다. 이는 로컬푸드 정책이 추진 중인 완주군의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4.3. 지역농업에 역동성, 유연성 제고 효과

- 생산과 소비의 규모가 작을 경우 경제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작은 규모는 유연성이 풍부하고 개성을 발휘하기 쉬운 조건이기도 하다. 지역경제 내부의 자립적인 소규모 경영체는 소비자 수요 변화에 대응하여 주체적으로 변화를 주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 지역 먹거리 체계가 지역농업에 새로운 변화, 역동성을 주고 있다는 사실은,

로컬푸드 직매장 개장 이후 새로운 상품을 출하하고 싶다거나 다품목을 생산하는 복합경영으로 전환을 시도하는 생산자의 변화를 통해 나타난다.

- 로컬푸드 직매장을 통해 생산자의 농업경영이 복합경영으로 전환이 늘었다는 의견은, 로컬푸드 사업 이전에는 6.50점(2018년 조사)이지만 로컬푸드 직매장의 실제 운영주체는 6.98점(2016년 조사)으로 응답했다.
- 새로운 상품을 제안하고 출하하는 생산자는 로컬푸드 직매장 사업 이전에는 6.59점(2018년 조사)이지만 로컬푸드 직매장의 실제 운영주체는 7.61점(2016년 조사)으로 응답했다. 다만, 지역 전통음식이나 지역문화와 접목한 상품화는 로컬푸드 출하와 관계없이 2016년 조사보다 2018년 조사에서 긍정적인 응답률이 높다<표 3-14>.

〈표 3-14〉 사업체가 본 생산자의 변화

		복합경영으로 전환이 늘었다	신상품 출하 제안자가 늘었다	지역 전통음식 상품화가 늘었다	지역문화 접목, 상품화가 늘었다	로컬푸드 출하 희망 귀농/귀촌자가 있다
2016년 조사		6.98	7.61	6.44	5.90	6.52
2018년 조사	계	6.50	6.59	6.68	6.48	6.91
	청양(농촌)	5.18	5.26	5.40	5.42	5.38
	완주(복합)	7.20	6.98	7.45	7.21	7.98
	유성(도시)	7.14	7.55	7.20	6.86	7.39

주: 10점 척도(0: 전혀 아니다, 5: 보통, 10: 매우 그렇다)로 조사함.

자료: 정은미 외(2016)와 2018년 2월 조사 결과를 재구성함.

○ 지역 먹거리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선호하는 생산자나 상품이 있고, 상품의 품질과 가격 이해를 통해 클레임이 줄었으며, 상품 포장이나 단위 등 품질에 대해 건의하고 조언하는 소비행위 변화가 나타난다<표 3-15>.

- 대도시 직매장일수록 도농교류에 참여하고 생산자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는 소비자가 있고, 로컬푸드가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바를 이해하는 소비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표 3-15〉 운영주체가 본 로컬푸드 이용 소비자의 변화

		상품 포장단위/ 품질 건의	상품의 품질/ 가격 이해	도농교류 프로그램 참여	특정 선호 생산자/ 상품 존재	생산자에게 고마움 표시	지역경제 기여도 이해
운영 주체	지자체 개설	7.43	7.36	6.43	7.21	7.07	6.79
	생산자단체	7.33	6.83	6.17	7.67	6.83	6.00
	지역농협	6.80	6.88	5.05	7.27	6.93	6.76
입지	대도시 인근	7.15	7.31	6.77	7.69	7.62	7.38
	중소도시 인근	6.69	6.54	5.23	7.50	6.92	6.38
	농촌지역	7.27	7.32	5.00	6.82	6.59	6.64

주: 10점 척도(0: 전혀 아니다, 5: 보통, 10: 매우 그렇다)로 조사함.

자료: 정은미 외(2016).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로컬푸드 추진 전략과 정책과제』. KREI. p.125.

○ 지역 푸드플랜은 생산자가 생산 이외에 가공, 체험 관광에 관심을 갖게 하며, 방문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더욱 자극받게 한다.

- 대도시 로컬푸드 직매장일수록 이 경향은 크고, 관광객이 직매장을 방문하거나 지역 관광 명소가 되며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준다<표 3-16>.
- 소량 다품목을 생산·판매하는 중소규모 생산자의 총소득은 비교적 낮기 때문에 생산자는 판매활동 이외에 부가적인 활동이 매출액 증가로 연결되어야 의미 있는 활동으로 평가할 수 있다.

〈표 3-16〉 운영주체 관점에서 본 생산자와 지역의 변화

		생산자 가공 관심 증대	생산자 체험·관광 관심 증대	지역농업에 관심 갖게 함	지역 방문 관광객 증가	지역 관광 명소화 진행
운영 주체	지자체 개설	8.14	6.79	8.29	8.00	6.71
	생산자단체	6.00	6.33	6.83	6.67	5.17
	지역농협	6.98	6.24	7.59	6.80	6.15
입지	대도시 인근	7.69	7.54	8.15	8.00	7.54
	중소도시 인근	7.42	6.31	7.92	6.96	5.58
	농촌지역	6.50	5.77	7.09	6.64	6.09

주: 10점 척도(0: 전혀 아니다, 5: 보통, 10: 매우 그렇다)로 조사함.

자료: 정은미 외(2016).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로컬푸드 추진 전략과 정책과제』. KREI. p.127.

- 로컬푸드 직매장에 출하하는 생산자는 자신의 농산물이 소비자에게 정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느끼고 소비자를 이해하는 비율이 증가했다<표 3-17>.

〈표 3-17〉 출하 생산자의 생산과 소비에 대한 의견

단위: %

		생산자는 안전한 농산물 공급해야 함	내가 생산한 농산물은 정당한 평가를 받음	안전한 먹거리를 찾는 소비자 행동을 이해함	토종종자 보전이 중요함	가격, 품질 따지지 않는 단골 소비자가 10명은 있다
2016년 조사		8.75	7.34	8.14	7.66	7.29
2018년 조사	계	7.76	5.54	6.46	6.28	5.93
	청양(농촌)	7.51	5.19	5.84	5.66	5.35
	완주(복합)	7.57	5.78	6.58	6.56	6.28
	유성(도시)	9.00	5.88	8.00	7.33	6.61

주: 10점 척도(0: 전혀 아니다, 5: 보통, 10: 매우 그렇다)로 조사함.

자료: 정은미 외(2016)와 2018년 2월 조사 결과를 재구성함.

- 생산자가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해야 한다는 의견은, 로컬푸드 직매장 사업 이전에는 7.76점(2018년 조사)이지만 로컬푸드 직매장에 출하하는 생산자는 8.75점(2016년 조사)으로 응답했다.
 -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이 정당한 평가를 받고 있다는 생산자는, 로컬푸드 사업 이전에는 5.54점(2018년 조사)이지만 로컬푸드에 참여하는 생산자는 7.34점(2016년 조사)으로 응답했다.
 - 로컬푸드를 통해 생산자가 소비자를 이해한다는 의견에는 로컬푸드 사업 이전에는 6.46점(2018년 조사)이지만 로컬푸드를 실제 운영하는 주체는 8.14점(2016년 조사)으로 응답했다.
 - 지역 식문화의 특성을 고스란히 간직한 토종종자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비율도 로컬푸드 사업 이전에는 6.28점(2018년 조사)이지만 로컬푸드에 참여하는 생산자는 7.66점(2016년 조사)으로 응답했다.
- 로컬푸드 직매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는 지역농산물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느끼고 지역농산물 구매가 지역 생산자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표 3-18>.

- 소비자가 지역농산물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로컬푸드 사업 이전에는 6.53점(2018년 조사)이지만 로컬푸드 직매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는 7.91점(2016년 조사)으로 응답했다.
- 소비자의 지역농산물의 지역 내 유통 희망은 8.02점(청양: 8.47점, 완주: 8.38점, 유성구: 7.46점)으로 농촌지역일수록 그 비율이 높다.
- 소비자는 지역농산물 구매가 지역 생산자에게 도움이 되고 고령농·중소농에게 판매시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로컬푸드 사업 시 고령농과 중소농에게 판매시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로컬푸드 사업 이전은 7.49점(2018년 조사), 로컬푸드 이용 후는 8.24점(2016년 조사)으로 로컬푸드 이용 소비자일수록 그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 지역농산물의 가격이 비싸도 구매할 의향이 있는 경우는, 로컬푸드 사업 이전 6.36점(2018년 조사)보다 로컬푸드 이용 소비자 8.10점(2016년 조사)으로 현재 로컬푸드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의향이 상대적으로 높다.
- 로컬푸드를 통해 소비자는 지역농업과 생산자에 동조의식이 생성되는데 생산자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는 상생의 원리이다. 그러므로 로컬푸드 사업은 지역 인적 네트워크 활용과 연계성을 고려한 설계가 필요하다.

〈표 3-18〉 소비자의 지역농업 생산과 소비에 대한 의견

단위: %

	지역 생산 농산물은 안전하다	지역산의 지역 내 유통 희망	지역 생산자에 도움	고령/중소농 판매시장 필요	가격 비싸도 지역농산물 구매함	생산자에게 안정적인 소득 필요	지역농산물 타 지역에 홍보 희망	
2016년 조사	7.91	-	8.69	8.24	8.10	8.65	7.68	
2018년 조사	계	6.53	8.02	8.31	7.49	6.36	8.23	7.90
	청양군	6.28	8.47	8.53	7.15	6.02	8.53	8.30
	완주군	7.16	8.38	8.63	7.92	7.01	8.50	8.34
	유성구	6.07	7.46	7.90	7.25	5.93	7.82	7.30

주: 10점 척도(0: 전혀 아니다, 5: 보통, 10: 매우 그렇다)로 조사함.

자료: 정은미 외(2016)와 2018년 2월 조사 결과를 재구성함.

5. 요약 및 시사점

- 지역 푸드플랜 구축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첫째, 직매장, 급식 등 관계시장 창출로 생산자 소득이 증가한다.
 -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로 얻는 생산자 1인당 연간 소득 증가액은 청양군 3,650천 원, 완주군 4,580천 원, 유성구 4,290천 원(2016년 조사결과 활용)이며, 지역 푸드플랜이 가동될 경우, 지역 내 생산자 연간 소득 증가액을 최소 규모로 가정하면 청양군 11.4억 원, 완주군 47.0억 원, 유성구 62.4억 원이다.
 - 둘째, 생산자의 소득 증가는 지역 내에서 소비지출 증가를 유발한다.
 - 생산자 소득 증가 중 지역 재투자는(지역 소비로 환원되는 비율) 평균 22.9%(청양군 23%, 완주군 21.8%, 유성구 24%)이며, 생산자의 소득 증가로 인해 지역 내 연간 소비 증가액은 청양군 2.4억 원, 완주군 9.4억 원, 유성구 12.3억 원이다.
 - 셋째,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 생산조직 확대, 먹거리 관련 창업 및 고용 증가 등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은 청양군 95명, 완주군 340명, 유성구 308명으로 평균 248명이다.
- 지역 푸드플랜은 농업에 유연성과 역동성을 제고하여 지역농업의 지속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 이에 대한 주요 연구는 현재(2018년 조사) 및 로컬푸드 직매장 이용 주체(2016년 조사)를 활용한 결과이다.
 - 소비자-생산자 상호이해 증진을 통해 지역사회의 신뢰 제고
 - 생산자 자존감 상승(10점 척도, 7.34점 → 8.02점)
 - 소비자의 지역농산물의 지역 내 유통 희망: 전체 8.02점(청양군 8.47점, 완주군 8.38점, 유성구 7.46점)
 - 생산자의 소비자 행동 이해 정도 향상: 6.5점 → 8.14점

- 지역 푸드플랜은 지역 중소농의 판로 및 소량 다품목 생산기반 확보를 통해 지역농업을 활성화한다.
 - 고령 생산자 참여 적합(10점 척도, 7.50점 → 7.67점)
 - 여성 생산자 참여 적합(10점 척도, 7.66점 → 7.97점)
 - 생산자가 농산물 가공에 관심 갖게 함(7.85점 → 8.14점)
 - 안전한 생산방식으로 전환에 도움(10점 척도, 7.80점 → 8.01점)
 - 지역농산물에 대한 지불용의 증가(가격이 비싸도 지역농산물 구매, 6.36점 → 7.72점)
 - 복합경영으로 전환하는 생산자 증가(6.50점 → 7.71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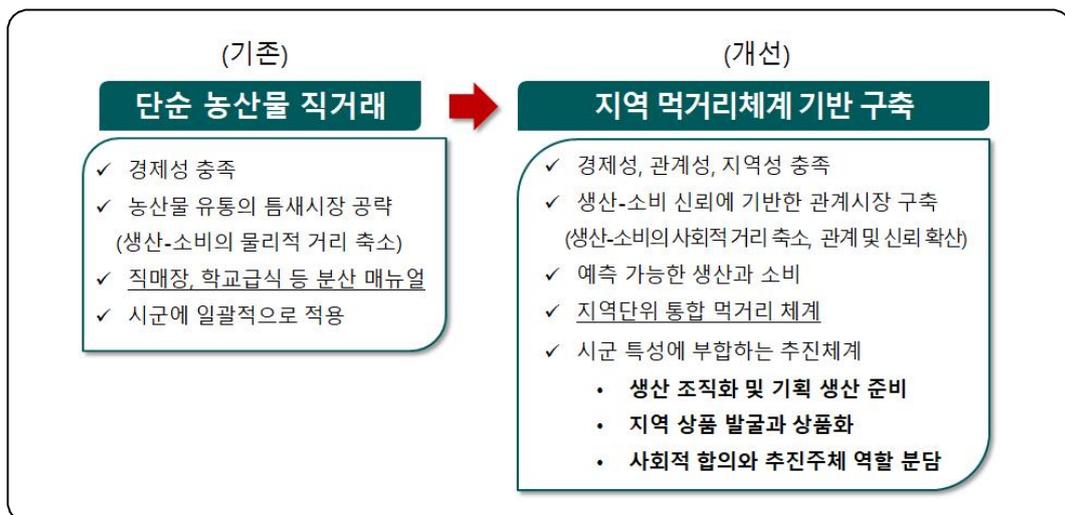
제 4 장

지역단위 푸드플랜 추진 방향과 과제

1. 지역 푸드플랜의 추진 방향과 전략

- 지역 푸드플랜은 지역농업의 지속성을 높여 지역을 유지시키고, 지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한다. 그 과정에서 지역 먹거리 사업에 경제성뿐만 아니라 지역성, 관계성을 강화하며 먹거리 공공성을 실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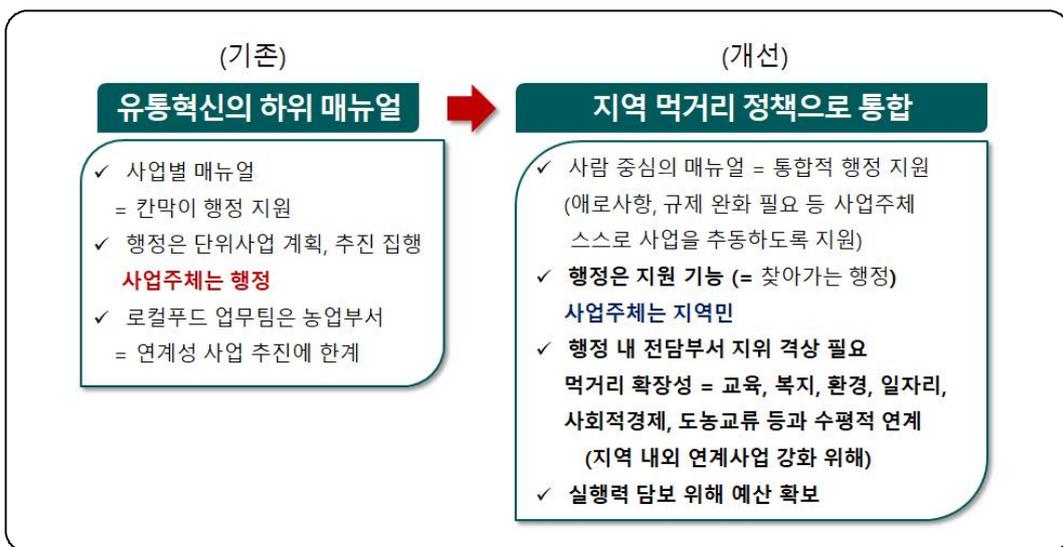
〈그림 4-1〉 지역 푸드플랜의 기본 방향



자료: 필자 작성.

-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과정은 경제성과 함께 신뢰를 중시하는 관계시장을 만들고자 한다.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관계형 시장은 가격 기준의 일반 시장과 달리 생산과 소비가 서로를 배려하며 공생을 모색한다. 생산자는 소비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생산하고, 소비자는 생산자의 경제성과 환경을 고려하며 소비하는 ‘생산-소비의 사회적 거리’가 축소됨을 의미한다.
 - 지역 먹거리 체계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생산이 조직화되고 연중 공급체계를 갖추면 예측가능한 생산과 소비체계가 구축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지역경제는 활기를 얻고 지역특성에 따라 다양한 상품이 발굴되어 지역 관광을 촉진한다.
- 지역 푸드플랜은 먹거리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과 민간이 협력하여 먹거리 관련 사업을 시군 통합형 관리로 전환하려는 정책이다.
- 행정은 지역 먹거리의 선순환 체계를 만들고자 하는 지역민을 중심으로 통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그림 4-2〉 지역 푸드플랜의 추진 전략



자료: 필자 작성.

- 지역 먹거리 관련 사업의 주체는 지역민이지만 지역 농식품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민이 애로사항이나 규제를 완화하고 스스로 필요한 사업을 찾아가도록 지원하는 일은 행정의 역할이다.
 - 따라서 행정 내 푸드플랜 전담부서와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먹거리 관련 사업은 생산-소비 과정의 교육, 복지, 환경, 일자리, 사회적경제조직 등과 연계 가능하므로 전담부서는 통합적인 정책을 수행하는 직제와 실행력 담보를 위해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 지역 푸드플랜은 지역민의 소통을 넓혀 먹거리 생산과 소비에 관한 정책을 스스로 결정하며 주민자치를 실현한다.
- 먹거리 유통이 광역화, 글로벌화되며 먹거리 소비는 더 이상 소비자 개인 선택의 문제에 국한하지 않는다. 생명의 원천인 먹거리를 안전하게, 안심하며 소비하기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이다.
 - 지역민이 지역농업과 생산자에 관심을 갖는 것은 건강한 식생활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먹거리의 근원을 깨달은 지역민이 지역 먹거리를 요구하며 산업화 이전의 지역농업 복원과 지역 내 유통망 구축 등 지역농업 정책 수립에 관여하게 된다.
 - 지역 푸드플랜은 지역 먹거리의 안전·안심 강화가 지역 생산자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상호조정 과정 속에서 상생하는 방안을 찾는다. 먹거리를 단지 상품으로 취급하며 거래하는 관계에서 지역 식문화의 보전과 지역 자원의 활용, 나아가 지역경제의 순환을 배려하는 거래하는 새로운 생산과 소비 관계이다.

2. 지역 푸드플랜의 분야별 과제

- 지역 내 먹거리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생산, 소비, 리사이클, 실행체계운영의 4개 부분으로 구분하여 과제를 정리하였다.

2.1. 생산분야

2.1.1. 생산 주체 육성 및 조직화

- 지역 푸드플랜에서 생산주체는 지역 내 모든 생산자가 참여할 수 있지만, 농촌일수록 수요가 공급보다 적기 때문에 중소규모 생산자의 참여가 보다 용이하다.
 - 단, 1ha 미만의 소규모 농가는 고령농, 여성농, 겸업농이 대부분이고 이들은 상품화에 미숙하므로, 교육과 훈련을 통해 이들이 생산하는 다양한 농산물을 지역 시장에 원활히 공급하도록 하는 일이 중요한 과제이다.
 - 소규모 농가를 파악하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토지 이용, 시설하우스 분포나 저장시설 등 생산조건, 참여 가능 인력, 상품화 시설 등 생산 및 유통조건을 세밀하게 조사·분석해야 한다.
- 생산 조직화는 다음 지원사업과 병행할 수 있다.
 - 지역여건에 맞는 비가림하우스 시설 지원, 소규모 영농기계 지원, 소규모 나물건조기 지원 사업, 저온저장고 지원 등이다. 특히 고령농, 소규모 농가, 여성농업인, 귀농·귀촌인 등 중점 조직화 대상으로 발굴한다.
 - 품목 생산 및 조달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는 겨울이다. 겨울철 채소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소규모 비닐하우스와 소규모 관정을 연결한 패키지 지원사업을 강화한다.

〈표 4-1〉 지역 푸드플랜의 분야별 과제

분야	세부 분야	실행과제
생산 분야	기획생산	- 지역 생산품목, 수량, 생산기반 등 조사, 분석 - 연중, 다품목 생산기반 조성(비가림하우스, 저온저장고 지원 등) - 기획생산 관리시스템 구축(대도시 관계시장 포함)
	농가조직화	- 분야별(학교급식, 공공급식, 직매장 등) 참여농가 조직화 - 지역푸드, 안전성관리, 품목다양화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 - 농가여건 적합 생산, 출하관리체계 구축
	농민가공 활성화	- 농민가공 활성화(품목다각화, 레시피 역량강화 등) - 소비처, 소비자 수요에 기초한 가공 상품화
소비 분야	관계시장 확대	- 지역 내 적정 직거래장터 등 유통경로 확보 - 학교·공공급식 공급확대(지역산 공급비중 확대) - 취약계층 먹거리 지원 공공성 담보 - 대도시권역 관계시장 적극적 진출(기 관계 사업 검토)
	소비자 조직화	- 소비자 식교육, 도농교류, 농촌체험 등 소비자 조직화 - 지역 시민사회단체와의 거버넌스: 이용, 참여 확대 - 학교·공공급식 관계자 워크숍, 협의조직 활성화
	먹거리체계	- 관내 먹거리체계 통합시스템 - 농식품 안전통합관리 지원체계 - 생산, 공급여건 피드백 관리체계 구축
리사이클 분야	음식폐기물 최소화	- 유통, 먹거리체계에서 음식폐기물 최소화 - 포장재 등 최소화 및 친환경 소재 활용 등
	자원순환센터 운영	- 음식폐기물 자원화 시스템 구축 - 수거, 재활용 퇴비생산, 농업 투입
실행 체계 운영 분야	제도정비	- 지역 푸드플랜, 먹거리체계 계획 수립 - 관련 조례 통합형으로 개정(로컬푸드, 학교·공공급식, 도농교류 등) - 전담부서 인력 총원 및 협력(청양푸드 먹거리정책과 등) - 지역푸드 인증체계 정비(안전성 관리 체계, 브랜드 체계 등)
	시민참여 확대	- 거버넌스 운영(행정, 생산자, 소비자, 사회적경제 등 제 관련단체) - 실행단계별 포럼, 운영위원회 등 시민참여 확장
	통합추진체계 구축	- 지역푸드통합지원센터 운영(직거래, 학교·공공급식, 마케팅 등) : 생산 및 소비 조직화, 가공상품화, 유통 등 통합관리운영조직 : 지역 내외 로컬푸드, 사회적경제 관련 조직 발굴 및 협력 - 지역 푸드플랜 계획에 대한 성과 피드백

- 지역 푸드플랜에 관련된 정책이 소수 농업인의 전유물이 되지 않도록 실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소규모 농가(영세농, 고령농, 여성농, 귀농귀촌, 겸업농)에 충분하게 정보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정보 전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 생산 조직화를 위해 읍면, 마을단위 방문설명회를 조직하고 인적·물적 자원, 생산 가능 품목, 참여의사 등을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
 - 마을단위-읍면단위-시군단위의 중층적인 설명회와 교육을 통해 실수요 농가의 참여를 확대하고, 최종 시군단위 교육에서는 단체장의 특강 등을 통해 정책 신뢰도를 제고해야 한다.

2.1.2. 기획생산과 소규모 농식품 가공사업 육성

- 기획생산은 수요 맞춤형 생산방식이다. 지역민에게 필요한 다양한 품목을 연중생산 공급해야 하므로 지역농업의 일정 영역을 재편함을 의미한다.
 - 직매장을 기준으로 1차 농산물은 최소 150종류, 가공품은 70여 종류 이상을 구비하여 개장하고, 지역민의 요구에 부응하여 공급품목 수를 늘려야 한다. 그러므로 계절별 다양한 품목과 품종의 재배경험이 풍부한 여성 고령농의 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다.
- 농업인이 농산물 가공에 직접 참여하는 일은 부가가치를 높이고 상품 다양화에 기여한다. 농업인가공센터를 설치하여 창업보육을 비롯하여 가공을 원하는 농업인은 누구든 가공시설을 이용하도록 개방해야 한다.
 - 가공식품은 먹거리의 기본품목인 장류(된장, 간장, 고추장 등), 기름류(참기름, 들기름 등), 콩식품 가공류(두부류, 두유 등)를 중심으로 우선 조직화하며, NON-GMO, 무첨가제 등 안전성 강화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
- 농업인 가공은 다음과 같은 단계적인 육성과 지원이 필요하다.
 - 시군별 농업인가공센터를 통해 가공 기초교육 및 심화교육, 창업 인큐베이팅 활동을 지원하고, 가공센터의 시설을 활용하여 독자적인 소규모 시

제품 생산이 가능하도록 한다.

- 지자체는 완주군의 오늘우유, 소규모 육가공센터와 같은 품목이나 테마별 농업인 가공 창업지원, 기존 마을기업에 소규모 가공사업 지원을 할 수 있다.

2.1.3. 농식품 안전성 통합관리

- 지역 푸드플랜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나 충성도 향상에 기초적인 대안은 안전성 관리 사항이다.
 - 농식품 안전성 관리는 지역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고 로컬푸드 직매장에서도 추가적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 그러나 농업기술센터나 직매장의 늘어나는 업무량과 소비자의 안전농산물에 대한 관심을 고려하면 안전성은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 그러므로 농식품 안전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중층적인 관리시스템 강화와 친환경농업으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 안전성 관리는, 1차적으로 생산자 및 각 사업장 운영인력에 대한 교육을 통해 생산이력표시제,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하고, 2차적으로는 자체 간이 검사, 3차적으로 전문기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광역 보건환경연구원 등)과 업무협약으로 생산 및 유통단계의 잔류농약 검사 등을 정기적으로 추진한다.
 - 친환경농업으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퇴비, 종자, 모종 등 농자재의 공급이 중요하다. 전북 완주군은 친환경농가를 중심으로 ‘안심농자재 사업단’을 운영하며 참여농가에 보급하고 있다.

2.2. 소비분야

2.2.1. 관계시장 구축과 확대

- 일반 시민에게 공급(직매장, 레스토랑, 꾸러미 사업 등)
 - 일반 지역민 대상인 관내 로컬푸드 직매장은 민간 사회적기업이나 농협에서 운영되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 농가 참여 및 농식품 판매는 저조한 실정이므로 적극적인 원인분석과 대책이 필요하다.
 - 읍내권 직거래장터, 꾸러미 사업 등과 연계하여 지역민의 먹거리 유통경로와 구매처 등을 조사·분석하여 지역 시장에 유통 비중을 높여야 한다.

- 학교 및 공공급식, 단체급식에 납품
 - 학교 및 공공급식은 지역 먹거리 공급 비중을 높이는 향후 상황을 고려하여 센터의 시설(유통시설, 전처리, 저장고, 가공 등)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 취약계층의 먹거리 복지 실현을 위해 지역 먹거리 공급
 - 독거노인, 저소득층 등이 대상인 취약계층은 사회적 약자일수록 안전, 건강먹거리에 취약하므로 안심·건강 먹거리 제공에 노력해야 한다. 특히 사회적 소외 계층에 대한 먹거리 복지 실행시스템 구축을 위해 푸드뱅크 사업, 엄마의 밥상 등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다.

- 직매장, 학교 및 공공급식 납품뿐만 아니라 향후 단체급식, 대도시 권역의 관계시장 등 소비지 확대가 필요하다.
 - 생산 조직화 및 연중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소비처와 소비량 예측이 필요하고 관계시장 확대와 생산 조직화가 병행되어야 한다.

2.2.2. 소비자 교육과 일자리 창출

- 먹거리 의사결정의 한 주체인 소비자 교육을 통해 소비자가 지역농업, 지역 경제에 관심을 갖고 스스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 대부분 지역에서 생산자에 대한 교육은 조직화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지만, 로컬푸드를 찾는 소비자에 대한 교육과 서비스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 소비자를 교육하고 조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추진해야 한다.
 - 소비자 가족 나들이 농촌 팜투어(farm tour): 주말에 소비자 가족 초청 로컬푸드 현장 투어를 통해 글로벌푸드와 로컬푸드에 대한 이해, 농가의 어려움 공유, 소비자로서 생산자에 대한 배려 등을 고취한다. 팜투어는 직매장의 진성 고객화를 촉진하는 프로그램이다.
 - 도농교류: 지역 내 소비자 또는 가까운 도시의 소비자를 초청하여 농업 현장 방문, 생산자와 간담회 등을 실시한다. 경기도 화성시, 전남 화순군은 시티투어 프로그램에 로컬푸드 직매장을 연계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 로컬푸드 사업장을 활용한 계절별 작은 축제: 작은 음악회, 영화 모임, 생산자와 소비자의 만남 등의 정기 프로그램으로 상호 신뢰를 증진하는 이벤트이다.

- 소비자가 단순한 식재료 구매를 넘어 지역 먹거리체계 구축을 위해 다양한 자원봉사, 소모임 등을 활성화하고 가공, 도농교류, 문화교육사업단 등 각종 프로그램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면서 스스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 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교류 프로그램 참여를 계기로 소비자협동조합을 구성하여 외부 견학자에게 지역을 소개하는 일을 전담하고 있다.

2.3. 리사이클 분야

2.3.1. 음식 폐기물 최소화

- 지역 내 로컬푸드 관련 사업체는 생산과 유통단계에서 환경을 배려하는 최소한의 투입재와 친환경적 포장재 사용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
 - 최근 제기되고 있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운동과 함께 음식 폐기물을 최소화하며 적정 구매, 음식물을 남기지 않는 사회 환경 캠페인으로 확산한다.

2.3.2. 자원순환센터 운영

- 음식 폐기물 수거 시스템을 통하여 음식 폐기물을 퇴비로 자원화하는 시스템을 모듈화해야 한다.
 - 음식 폐기물을 수거하여 낙엽 등 숙성퇴비로 재생산하고, 이를 로컬푸드 참여농가에 제공해 친환경 농업(친환경 퇴비지원 사업 등)과 연계하는 시스템이다.
 - 일본 야마가타(山形) 현 나가이(長井)시는 인구 3만 명에 불과하지만 지역 내 자원순환센터 운영으로 유명하다. 유기농가와 지역 환경단체 주도로 ‘지역사회는 퇴비를 만들고 농민은 농산물 만들기’를 실천한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1톤당 3만 엔이 소요되었으나 지역 내 자원순환센터가 연간 1,100톤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고 퇴비로 판매하며 처리비용이 감소하였다. 퇴비 400톤을 생산하며, 퇴비 10kg당 241엔에 판매한다.

2.4 실행체계 운영분야

2.4.1. 법·제도 정비

- 지역 푸드플랜이 제대로 작동하고 지역 먹거리 체계가 생산에서 소비까지 연결되어 사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 예를 들면, 학교급식에 지역농산물을 우선 공급하기 위해서는 교육청의 지침을 위반하지 않고 지역농산물을 현물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필요하다. 그 밖에도 공공급식이나 단체급식에 지역농산물 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제반 조치들은 조례의 형태로 지원해야 한다.
 - 농업 부문에 필요한 조례: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 학교 및 공공급식에 필요한 조례: 학교급식 지원 조례,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 조례
 - 복지시설, 노인 및 아동 복지 등에 지역 먹거리 공급 시 필요 조례: 노인 복지 지원 조례, 아동복지 지원 조례, 노인 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2.4.2. 지역푸드통합지원센터

- 지역푸드통합지원센터의 시스템이 구축되는 최소 3년에서 5년간은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공공에서 지원이 필요하다. 지역 푸드플랜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조직으로 재단법인,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형태가 있다.
 - 행정과 의회, 농업인, 시민사회단체 간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쳐서 지역푸드통합조직을 추진할 수 있다.
 - 지역 푸드플랜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현장 실행조직 및 추진주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행정조직과 파트너십을 유지하면서 현장을 조직할 수 있는 핵심 운영인력 확보가 중요하다. 지역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시야를

갖춘 인력으로서 선발해야 한다.

- 지역푸드통합지원센터의 일련의 조직화 사업은 지역 푸드플랜 추진주체인 중간지원조직이 담당하고 지자체는 행정 및 재정부문에서 연계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해야 한다.
- 지역푸드통합지원센터는 행안부와 협의 후 다음 과정을 거쳐 설립한다.
- 심의위원회 구성 및 법인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 지역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출연금과 위탁운영비 확보: 출연금은 지역상황에 맞게 출연 가능하고 출연금은 기본재산, 보통재산으로 분류한다. 위탁운영비는 매년 여건에 맞게 책정하고 본예산에 포함한다.
 - 실무운영진 구성: 지역푸드 플랜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실행력을 겸비한 전문가를 채용한다.
 -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실행
- 지역푸드통합지원센터는 별도로 재단법인을 설립하거나 재단법인 부자농촌센터의 명칭과 사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기존의 각종 협동조합, 가공지원센터, 학교급식지원센터 등의 역할과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이다. 민간조직은 출연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다.
 - 일부 재단법인 설립에 관한 부정적인 시각이 있으나 지역 공공정책의 수요를 책임 있게 담보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는 것이 관건이다. 임직원 채용 및 운영지침 등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추진한다.

3. 사례지역 푸드플랜의 과제

- 농촌형에서 도시형으로 갈수록 먹거리 소비규모, 소규모 농업 및 먹거리 공공시장(학교·어린이집 급식 등) 비중이 증가한다.
 - 1ha 미만 농가 비중은 청양군(농촌형) 59%, 완주군(복합형) 76%, 유성구(도시형) 91%이다.
 - 지역별 공공 먹거리시장 규모는 청양군(농촌형) 9.1%, 완주군(복합형) 15.9%, 유성구(도시형) 17.1%이다.
 - 인구 3만 명 규모인 청양군도 공공 먹거리 시장의 규모는 50억 원으로 적지 않은 규모이다. 다만 품목의 다양성과 연중 수급 조절이 가능하도록 계획 생산이 필요하며 지역 먹거리의 수급을 총괄하는 기능이 필요하다.

〈표 4-2〉 지역별 먹거리 생산 및 소비 비교

구분	청양군(농촌형)	완주군(도농복합형)	유성구(도시형)
먹거리 소비 규모	529억 원	1,694억 원	4,689억 원
공공 시장 규모	53억 원(9.3%)	284억 원(16.8%)	860억 원(18.3%)
농업인구 (비중)	13,354명(40.8%) • 1ha 미만 59% • 시설재배, 특용작물 전업농과 고령농의 양극화	16,847명(17.6%) • 1ha 미만 76% • 도시화, 귀촌인 증가, 고령화로 소규모 농업 증가	5,910명(1.7%) • 1ha 미만 91% • 자급용 겸업농업 주류
주요 특징	• 60세 이상 인구 39.4% • 귀농·귀촌 증가, 소량다품목 시장 가능성 크지만 경험 전무 • 학교 및 공공급식 시작	• 60세 이상 인구 30.4% • 중소·고령농의 소량다품목 상품화 인지 • 다양한 사회적경제 조직 형성	• 60세 이상 인구 12.6% • 지역의 녹지 환경으로 지역농업의 중요성 대두 • 후계자 없는 고령화 진행 중

주: 먹거리 시장 규모는 학교급식, 공공기관 단체급식, 복지시설, 병원·요양원 등 포함.

3.1. 청양군

- 청양군은 지역 생산을 소비로 연결하는 과정에서 생산 조직화, 관계형 시장 창출이 미비한 단계이다.

- 올해부터 학교급식을 지자체 직영으로 전환·운영하고 있으므로 이후 공공급식 및 단체급식으로 확대를 기대하고 실행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실행체계는 인력 및 역량 강화가 핵심이므로 이에 대해 지자체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
- 지역적으로 귀농·귀촌인이 증가하고 고령농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량다품목 시장 형성의 가능성은 크지만 아직 소량다품목을 출하한 경험이 거의 없다.
 - 그러므로 생산자나 소비자, 사업체가 도농상생보다 경제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 따라서 푸드플랜 추진이 상품 판매의 수준이 아니라 지역민의 생활수준을 높이는 사업이라는 인식을 확고히 정립할 필요가 있다.
 - 특히 전체 군민을 대상으로 도농상생의 개념과 의의, 방법 등을 폭넓게 공유하는 사업이 필요하다.

3.2. 완주군

- 완주군은 지난 10년간 로컬푸드 시행 후 지역민이 로컬푸드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인프라는 구축하였으나, 지역민 누구에게나 지역 먹거리를 공급하도록 지역 내 유통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과제이다.
- 로컬푸드 정책 추진으로 중소농 및 고령농이 소량다품목의 상품성을 인지하고 참여하지만 연중 지속적이지 못하고 부분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 도매시장 출하량이 상대적으로 큰 중규모 농가도 로컬푸드에 참여를 희망하지만 유통량을 현재보다 확대해야만 중규모 농가의 참여가 가능하므로 새로운 수요처 발굴이 필요하다.

- 완주군은 로컬푸드 추진 중 생산-가공-물류 등에 다양한 사회적경제 조직을 결성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 다만 아직 자립적인 경영체가 일부에 불과하여 경영체 간 교류가 다소 부진하지만 이후 사회적경제 조직 간 사업의 수평적 연계를 모색하며 전 지역으로 확장해야 한다.

3.3. 유성구

- 유성구는 도시농업으로서 1차 농산물 생산은 일부이고, 대부분은 생산계약 가능한 인근지역에서 조달하는 수급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 도시지역의 지역 내 농산물 유통은 소비자 관점에서 건강 확보를 위한 도농상생이 관건이다.
 - 그러므로 도시 농업은 생산 조직화 강화, 관계형 시장 운영을 통해 실질 소득을 제고하는 방향과 지역민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원활히 공급하는 수급체계 구축의 두 가지 축이 필요하다.
- 그런데 도시형 푸드플랜이 소비자를 강조하다 보면 자칫 소비자 우위에서 인근 농촌지역 지자체를 평가하는 입장이 될 수 있다.
 - 그러므로 도시형 푸드플랜은 도농상생 원칙과 방향을 분명히 설정하고 관계형 시장 영역을 확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2017.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 기본계획(안).
- 완주군 농업·농촌발전기획단. 2008. 약속 프로젝트 5개년 계획.
- 완주군청 내부자료.
- 정은미·정전섭. 2012. 『로컬푸드 시스템 구축 기본계획 수립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정은미. 2011a.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로컬푸드시스템 구축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_____. 2011b. “일본 지산지소정책의 교훈.” 『2011 로컬푸드 전국대회 in 완주 자료집』. 전북 완주군.
- 정은미·김용렬·허주녕. 2016.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로컬푸드 추진전략과 정책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최종우·황운재. 2018. 『식품수급표 2016』.
- 허남혁. 2010. “로컬푸드운동의 제도화를 위한 과제.” 『한국 농업·농촌발전의 대안모색』. 제18회 연례심포지엄 자료집. (사)농정연구센터.
- _____. 2011. 『충남 로컬푸드 활성화 방안』. 충남발전연구원.
- 대전 유성구 통계연보. 2016.
- 전북 완주군 통계연보. 2016.
- 충남 청양군 통계연보. 2016.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017.
- 小林史麿. 2012. 産直市場はおもしろい—伊那・グリーンファームは地域の元氣と雇用をつくる. 自治体研究社.
- 秋津元輝. 2018. “小さな農業とは何か”. 「小さな農業に光あれ」 『農業と経済』2018—1·2合併号. 昭和堂.
- 香川文庸. 2018. “多様な経営様式がかみ合うモザック型農業像による未来—大規模経営・営農組織と「小さな農業」の支え合いによる地域農業の維持”. 「小さな農業に光あれ」 『農業と経済』2018—1·2合併号. 昭和堂.

